

발간등록번호
12-B553003-000005-01

ISSN 2288-7385

‘함께하자! 대한민국!!’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이슈보고서 Vol.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시사점

2016. 8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이슈보고서

Vol.9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이슈보고서 Vol.9



제목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이슈보고서 (vol.9)
발행처 국민대통합위원회
발행일 2016년 8월 10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19층
전화 02-6262-2106
홈페이지 www.pcnc.go.kr
집필진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이상신(통일연구원)
윤인진(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인쇄 (주)코리아프린테크

※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공식견해가 아닌 집필진의 의견임.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이슈보고서

Vol.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시사점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한광옥입니다.

우리 위원회와 국민통합에 전문성을 가진 12개 민관 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이슈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미리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한지 20년이 넘는 현재에도 자유와 희망을 찾아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고용지원, 정착금 지원 등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사회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적 관점과 이주민적 관점 등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정책적 변화도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선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슈보고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의 수용과 포용 문화 확산 및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웃으로서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면 통일의 역사는 한발 앞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빗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흘러 거대한 바다를 이루듯이 국민통합에 대한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우리나라를 하나로 뭉쳐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통합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며 사회적 포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 및 공유를 통한 논의의 확산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한 광 옥

목 차

제1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와 시사점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07
제2장 탈북민과 트라우마 탈북과정의 인권침해 경험과 트라우마 치료지원정책	
통일연구원 이상신	55
제3장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사회심리적 통합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윤인진	86

제1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와 시사점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3만여 명이 입국하였으며, 향후에도 입국자는 계속하여 발생할 전망이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은 동 법률에 의하여 사회적응교육, 주택 제공, 직업훈련, 의료지원, 교육지원, 고용지원, 정착금 지급,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연금의 특례적 지원 등 정부로부터 5년간 초기 정착지원을 받고 있음. 또한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자는 시드머니를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제도인 '미래행복통장' 서비스를 받게 됨. 그 외에도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도 실시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일부와 관련 정부기관, 그리고 민간의 지원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임. 특히 취업률, 소득, 재산 보유현황에서 일반국민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인식도 점차 부정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사회통합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력을 제고시키고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주도형 정착지원체계를 민관협동형으로 전환해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와 남한 주민들과 형평성 문제 해소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 규모와 성격변화, 그리고 북한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남북한 사회통합과 남북 주민들의 공동생활을 염두에 둔 정책적 설계와 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음.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적 지원과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그리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적응노력이 함께 요구됨.

I 서론 :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정책환경의 변화

- ◉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하여 통일을 맞이하거나, 북한주민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이 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수백만 명을 넘어설 것임

■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 및 성격 변화

- ◉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전체 규모는 1998년까지 1천 명을 넘지 않았으며, 6.25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분단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는 매년 10~20여 명의 소수만이 넘어 왔음.
- ◉ 2007년 누적합계 1만 명을 넘은 후 불과 3년 만에 2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6년 3만 명을 넘게 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규모 증대는 단순한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탈북동기와 탈북의 성격 변화(윤여상, 2014)를 함께 가져왔음.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합계(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구분	'09	'10	'11	'12	'13	'14	15. (잠정)	16. 6월 (잠정)	합계
남(명)	662	591	795	404	369	305	251	144	8,647
여(명)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605	20,896
합계(명)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749	29,543
여성비율	77%	75%	70%	72%	76%	78%	80%	80%	71%

※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검색일 2016. 7. 22

- ◉ 1980년대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 근무하던 현역 군인이 비무장지대를 내려왔기 때문에 당시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 입국은 동

1. 북한이탈주민 현황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의미

- ◉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의 이주민이며, 통일시대 신경험을 제공해주는 미리 온 통일로 불리고 있음.
- ◉ 이들은 단일민족이지만 이질적인 체제를 경험한 후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온 결혼이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와 유사점과 차이점을 함께 갖고 있음.
- ◉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다문화적 관점과 이주민 관점, 그리고 소수자와 통일대비 인력 등 다양한 관점과 성격이 부여되고 있음.

■ 향후 입국 규모 및 전망

- ◉ 한국사회는 2016년 7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맞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향후 5만 명 시대도 맞이하게 될 것임.
- ◉ 분단시대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10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임.

시에 진행되는 것이어서 구분할 필요가 없었음.

- 이들은 20-30대 연령의 남성이었으며,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단순 월남한 군인출신이었기 때문에 '월남귀순용사'로 불리었음.
- 당시 정부는 남북체제 대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남한이 체제우위에 있음을 국내외에 선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적 의미를 갖고 있었음.
- 따라서 정부는 국방부, 국가보훈처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가유공자 수준의 대우를 하게 되었으며, 당시는 취업을 보장하는 등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은 크게 겪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음.
- 하지만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부족과 이질적 체제와 문화적 차이로 사기를 당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는 다수 발생하였음.

◎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 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며, 소련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체제선전 역할은 의미를 상실하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 러시아와 동독,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에 나와 있던 북한 유학생과 파견 노동자(러시아 별목공 등)들이 국내 입국행렬에 동참하게 됨.
- 남북체제 대결을 위한 선전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약해진 상황에서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게 된 것이며, 연간 30-40명 수준이 입국하게 되자 정부는 1993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업무를 보건사회부로 이관.
- 결국 국가유공자에서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대상으로 성격 규정이 변화.

◎ 이와 같이 1990년대 초반까지의 북한이탈주민은 현역군인과 소수의 무역기관 근무자, 외교관, 그리고 유학생들이 자유를 찾아왔으나,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문제가 심각해진 1990년대 중반 이후는 생계곤란으로 생존을 위한 탈북이 주류.

-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어진 고통의 시대에 북한 주민 2-300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굶주림을 피하고 생존을 위해서 국경지역의 북한 주민들은 생명을 걸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이국땅에 몸을 맡기게 됨.
- 북·중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탈북 초기 굶주림에 피골이 상접한 북한주민들을 따뜻한 인간애와 민족애로 받아들임.
- 굶주린 이들에게 쌀밥을 먹이고, 임시 숙소를 제공하며 인간적 연민과 애정을 보여주었으

나, 수십만 명이 계속해서 국경을 넘는 상황이 이어지자 중국의 조선족과 중국사회는 이들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렵게 됨.

- 중국정부는 이들을 불법월경자로 간주하여 체포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정책을 현재까지 유지.
- ◎ 중국에 숨어살고 있던 탈북자들은 신변안전과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한국행 입국 루트를 개척하고, 주중 한국공관에 뛰어들면서 이들의 국내 입국은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이제 탈북자의 중심은 더 이상 20-30대 단신 남성들이 아니며, 과거에는 탈북자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던 여성과 노인, 어린이, 그리고 가족단위 탈북이 일상화됨.
- 이들의 공통점은 식량부족과 경제적 고통에 의한 생존의 문제와 자유와 풍요로움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다는 것.

■ 북한이탈주민 정책 환경의 변화 가능성

◎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녀노소가 탈북행렬에 모두 포함되면서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와 정책 환경에 큰 변화 발생.

- 기존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였으며, 성인이었기 때문에 결혼과 취업, 그리고 심리적 안정의 문제가 적응의 대표적 애로 사항
- 그러나 가족단위 입국자 발생과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세대의 입국이 포함되면서 기존 북한이탈주민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노출됨.
- 북한 학교 재학 중 입국한 탈북 청소년과 대학생의 교육문제, 세대갈등, 노인문제는 단독세대로 살아오던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발생하기 어려운 문제였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한국의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함축적으로 모두 발생하고 있으며, 그 증상은 더욱 심각한 경우가 많음.

- 2000년대 이후 가족단위 입국이 증가하면서 자유와 생존을 위한 탈북만이 아니라 기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재북가족이 가족재결합 차원에서 입국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윤여상, 2013)
- 북한에서 최근은 물론이고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생계문제를 겪지 않은 계층에서도 탈북행렬에 동참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탈북에서 점진적으로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주를 선택

하는 비율 증가(윤여상, 2002)

- 북한이탈주민 탈북동기의 변화와 가족 구성과 배경의 변화는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사회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고, 결국 정착지원제도의 변화도 초래하게 됨.

■ 김정은 등장 이후 변화

- 1990년대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던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규모는 김정은이 등장한 2012년 이후 급격히 감소.
 -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인 2011년 2,706명에 달하던 입국자는 2012년 1,502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2015년 1,275명으로 감소세 지속됨.
 - 북한이탈주민 감소 현상은 김정은 등장 이후 국경 단속과 처벌 강화, 식량 및 경제사정 호전, 그리고 재남가족의 재북가족 입국 노력의 저하, 탈북과정에서 소요되는 브로커 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이 원인.
- 북한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력하게 실시되고 있는 2016년 상반기에 김정은 등장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규모 증가세로 반전.
 - 4년 만에 입국자 규모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대북제재의 성과라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증가세의 지속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2016년 상반기 입국자의 입국배경을 분석해보면, 북한 내부에서의 탈북자 발생 규모가 증가했다기보다는 기존에 해외에 나와 있던 북한 노동자와 무역일꾼 등의 탈북이 증가했음.
 - 최근 북한 해외노동자의 한국 입국과 북한 간부층의 탈북행렬이 증가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정부 정책의 능동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

■ 정부 지원정책의 대응 현황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분단 이후부터 정책적 지원을 실시해 왔으나, 정부 지원정책의 목표와 특징, 지원수준은 시대별로 차이(윤여상, 2001) 발생.

-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 규모와 특성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정착지원 제도를 기존의 시혜적 차원에서 자립과 자활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들의 취업과 경제능력 향상에 주력(박윤숙, 2010)
- 특히 북한이탈주민 입국 규모의 증가 이후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과 서비스는 제도와 인력, 예산에서 과거보다 크게 확대.
 - 현재 하나원(통일부 운영 사회적응교육 시설) 본원은 물론이고 제2 하나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나원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교육과 지원을 담당하는 하나센터는 전국 16개 시·도 23곳에서 운영.
 - 현재 하나센터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소속의 전문상담사가 파견되고 있으며, 2010년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그 정점에 다다른 상황.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일반 국민의 2~3배에 달하고, 이들의 자살율과 범죄율도 높은 상황이며, 탈남과 재입북 사례도 끊임없이 발생.
-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사회적응교육과 사회정착을 위해서 정부가 연간 수천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수백 명의 정부와 민간 인력이 지원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부적응과 일탈현상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
- 북한이탈주민은 정부와 민간의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국내 유사 대상자들과 비교하여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이수정, 2014)되고 있음.
-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북한이탈주민의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하여 실제로 자립정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음(박성재, 2012)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인식도 부정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으며(윤인진 외, 2014),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통합에 장애가 될 것임.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현재까지의 정착실태와 성과를 재평가하고, 북한이탈주민 발생 배경과 특성의 변화 및 북한사회의 변화가능성, 그리고 국내 다문화 정책 등 유사 정책대상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 통일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는 경쟁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와 서비스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단체와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와 정착 환경을 검토한 후 효율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정책 환경의 변화

■ 정책환경 변화의 분석 필요

- 북한이탈주민은 분단 이후 계속해서 발생했으나, 이들에 대한 성격 규정과 지원수준, 그리고 정책 환경은 일정하지 않았음.
- 이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출생하고 교육받고 성장했으며, 북한 사회에서 사회화를 경험한 후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중적 문화와 경험을 갖고 있으나, 분단국가로서의 체제경쟁과 마이너리티 그룹으로서의 한계성 때문에 한국사회에 동화되고 수용되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에는 정착과 동화의 관점보다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들의 적응과정이 주목받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정착, 그리고 사회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환경을 살펴볼 필요 있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시기별 구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는 1962년에 법률로서 공식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이전 시기는 군 정보 및 보안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법률적 및 제도적 근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제도적 지원체계가 명확하게 제시된 이후 이들에 대한 명칭과 지원내용은 계속해서 변화해 왔으며, 정착지원 제도는 크게 다섯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① 보안차원 수용시기 (1953-1961)

- 북한이탈주민은 1948년 남북한 정부 수립 이후부터 등록되었으나, 6.25 전쟁이전에 등재된 인원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등록과 관리는 휴전 이후부터 시행.
 - 6.25 전쟁 당시 피난민, 실항민은 전쟁 시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되지 않았으며, 전쟁 이전에 남하한 북한주민들도 당시 그 규모가 상당수에 달하였으나, 일부만이 등록된 것으로 보임.
 - 전쟁 이후 송환된 국군포로는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쟁 직후 탈출한 북한군인 출신들도 일부는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실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현재 통계에 포함된 인원보다 많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법률은 공식적으로 1962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법률로서 규정되지 않고 군 정보 및 보안부서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들은 단지 군사 안보의 차원에서 수용되어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보훈차원 수용시기 (1962-1978)

-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이 제정됨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됨.
-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음.
- 당시 정부는 이들을 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서 지원하였음.

③ 체제선전차원 수용시기 (1979-1992)

-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포함되어 있던 북한이탈주민 관련규정이 1978년 「월남귀순용사 특별 보상법」으로 별도 제정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등장.
- 이 시기 수혜의 폭은 전 시기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졌으며, 보상금의 지급은 물론 특별임용제도, 주택무상제공(건평49.5평방미터 이상의 주택),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직장알선,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료보호 등으로서 국가유공자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됨.

④ 사회복지지원 수용시기 (1993-1996)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의 특혜적 성격¹⁾의 지원은 남한내 영세민과의 형평성 문제,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체제안정으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재검토.
-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은 1993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개정됨.
- 이 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수준을 낮추고 그 주무부서를 국가보훈처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시키는 것이 주 내용.

⑤ 통일 대비적 차원의 수용시기 (1997- 현재)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수준을 낮추고 주무부서를 보건사회부로 이관한 후 이들의 소득감소에 의한 생활비 부족과 기존 입국자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됨.
- 북한이탈주민들은 서울 주요 시설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법률 개정과 지원수준 제고를 요구하였으며, 결국 정부는 남북 분단 상태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성격과 입국 규모 증가를 고려할 때 기존의 지원정책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 장기적 생활안정대책의 수립을 전제로 법률 개정 추진함.
- 그 결과로 통일 대비적 성격을 갖는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었으며, 199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들에 주어지는 제반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으나, 사회적응훈련과 직업훈련 등 구체적 보호기준을 명시하고, 이들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
- 동 법률은 각 사안별 일부 개정을 계속해 왔으며, 현재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1) 김상균, "점검과 지향: 우리의 수용태세와 장기방안", 「북한탈출동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4), 47-48쪽. 김상균은 "이 법은 체제선전 등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며, 남파간첩 북한탈출 군인 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는 과도한 보상금 등 특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표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법률 변화

지원법률	시기	내용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1962.4~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실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1979.1~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 실시
귀순북한동포보호법	1993.6~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떨어진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7.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하여 전문자격을 인정하고, 취업보호기간을 확대하는 등 이들의 직업능력과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3. 정착지원제도와 정착수준 변화

■ 입국자 규모와 지원제도 변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는 지난 70여 년간 큰 변화를 겪음.
- 1960년대 연간 입국자 10여명 규모에서 1990년대 연간 입국자 100여명으로 증가하고, 2002년 연간 1천명을 넘은 이후 2006년 이후부터는 연간 2,0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함.
-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최근 4년간 1,500명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2016년 상반기 다시 증가세로 전환.
- 이와 같은 입국자 규모의 변화는 정착지원 제도를 변화시켰고, 또한 정착지원 제도는 입국자 규모에 영향을 주어왔음.

■ 관련 연구 조사결과 현황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와 입국자 규모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대별 정착지원 제

도 변화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정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연구 및 조사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움.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음.
 - 첫째,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 동일한 연구체계를 갖고서, 지속적으로 진행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까지의 사회정착 수준을 비교분석 할 수 없는 상황임.
 - 둘째,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에 대한 조사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해당 시기에 일회성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연구의 체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
 -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에 대한 분야별 조사결과가 시기별로 일부 존재하고 있고, 시기별 정착수준도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개별 연구자와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조사결과에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아서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어려운 상황.
 - 넷째, 각 시기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에 차이가 나타나는 조사결과가 일부 제시되어 있으나, 시기별 사회정착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통제된 조사결과는 없는 실정임.
- 특정 시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정부의 정착지원제도 변경에 의한 것인지, 다른 사회적, 개인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 변화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에 영향을 미쳤는지라도 그것이 전체의 원인 중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는 설명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변화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수준이 얼마나 제고되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사결과는 없다고 보아야 함.
- 이러한 객관적 설명력을 갖는 연구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착지원 제도변화와 대상자의 정착 수준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교한 연구조사 모형을 개발하고, 연구패널을 구성하여, 장기간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 현재 수십년간 지속된 패널 조사결과는 없으나, 경제실태(북한인권정보센터 NK Social Research 북한이탈주민경제고용동향 조사팀)와 심리적응(연세대학교 전우택 교수팀) 분야

에서 최근 몇 년간 지속된 패널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있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년 주기로 북한이탈주민 전수 대상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격년으로 표본대상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조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된다면, 정착지원 제도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수준간의 상관관계가 좀 더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근본적으로는 정착지원 제도변화와 정착수준간의 관계분석은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 상태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설계되어 진행되고 있는 조사는 그러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결과 해석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 현재까지 관련 연구의 결과

- 현재까지 발표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수준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수준은 일정 부분은 영향은 있으나, 획기적인 수준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제도는 시기별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이 제도적 영향으로 획기적으로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조사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움.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은 정착지원 제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정착이 어렵고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고 대부분의 조사결과는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보호 중심에서 자립과 자활 강화로 전환되고, 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신규 제도와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관련 통계에서 정착수준이 제고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 역시 단순히 입국자의 규모 증가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움직임 때문인지, 실제적인 사회적응 수준 향상으로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통제되고 엄격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밀한 분석이 요구됨.

Ⅱ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분석

■ 주요 활용 조사결과

-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는 정부 및 연구기관, 개인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정착실태를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례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관은 많지 않음.
 - 현재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경제사회통합실태조사」와 최근 북한이탈주민재단에서 실시되는 「경제활동 및 사회조사」가 대표적인 정례 조사결과.
 - 본 글에 사용된 정착실태조사 결과는 대부분 두 기관의 조사 자료를 활용.
 - 양 기관은 2015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16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인용자료는 2015년 조사결과임²⁾.

1. 한국생활 만족도

■ 생활 만족도 수준

-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양하게 제시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15년 지원재단 조사결과, 남한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63.8%이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3.5%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생활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응답하고 있으나, 세부영역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결과값이 많이 나타남.
- 또한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32.8%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한 것에 걸 맞는 만족수준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결과이며, 만족한다는 응답자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65.0%, 60세 이상 84.5%, 서울 68.8%, 남한거주 10년 이상 67.2%, 남한학력 대학졸업 이상 74.1%로 나타남.
- 고학력, 고연령층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생활 만족과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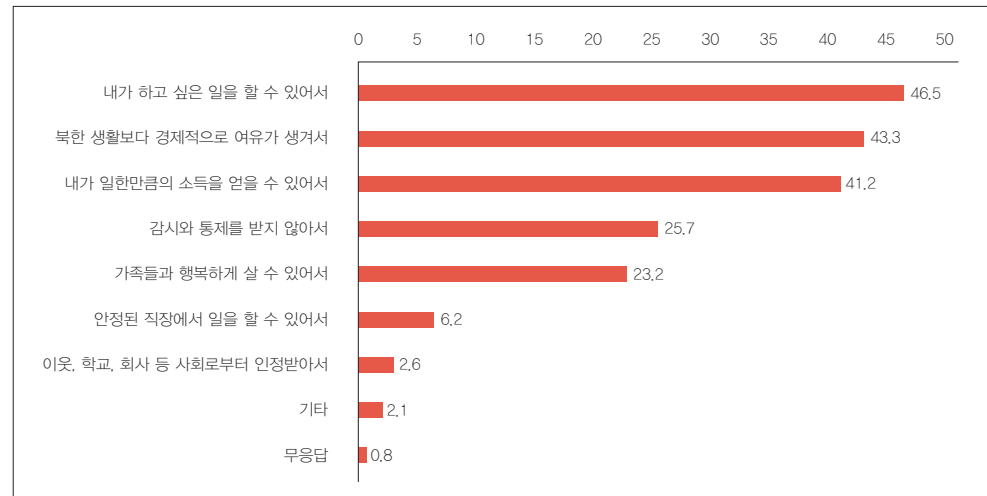
- 남한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46.5%, '북한생활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43.3%, '내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41.2%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자유로운 삶과 자본주의 생활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 남한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한 사회문화에 적응이 어려워서' 42.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편견과 차별 때문에' 30.9%, '나의 능력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격차가 심해서' 19.8%의 순서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응 애로, 그리고 차별과 편견에 많은 고통이 있음을 보여줌.

■ 남북한 생활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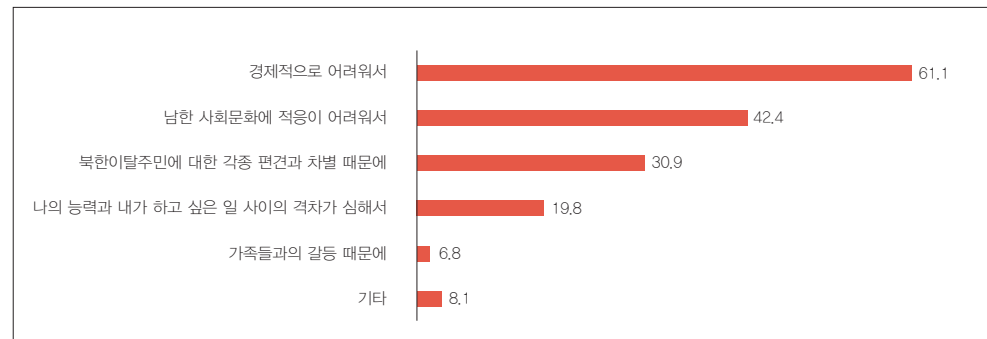
-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북한 생활 당시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재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음.

2) 북한인권정보센터·엔케이소셜리서치,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남북하나재단,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 「2015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참조.

〈그림 1〉 남한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 (n=1,569. 단위:%)



〈그림 2〉 남한 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 (n=94. 단위:%)



- 조사대상자의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층 상 1.9%, 상층 하 2.6%, 중간층 상 26.7%, 중간층 하 24.9%, 하층 상 16.7%, 하층 하 26.9%로 나타났으며, 중간층의 비율이 51.6%로 가장 높고, 하층은 43.6%, 상층은 4.5%로 나타나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층이 중심임.
- 현재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층 상 0.4%, 상층 하 0.6%, 중간층 상 10.6%, 중간층 하 25.6%, 하층 상 34.7%, 하층 하 27.4%로 북한에서보다도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상층(1.0%)과 중간층(36.2%)의 비율은 북한에서 보다도 많이 낮아지고, 하층(62.1%)의 비

율은 북한에서 보다도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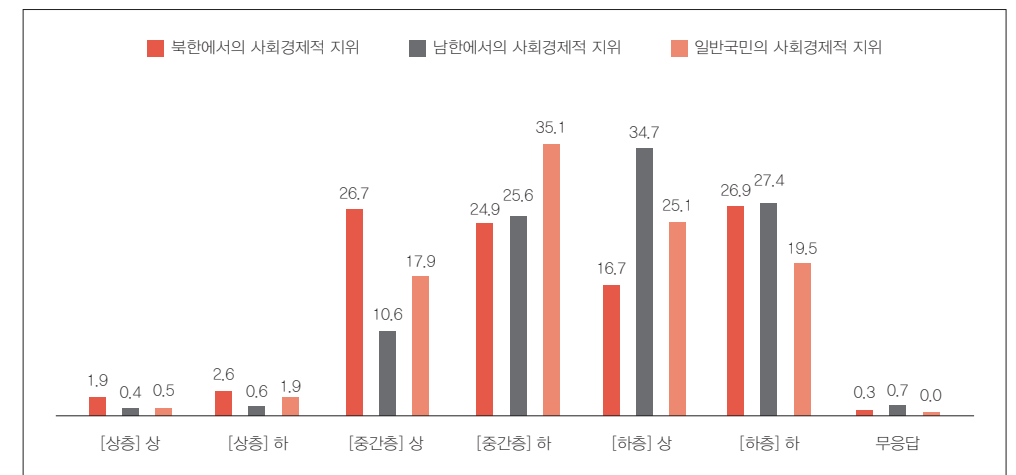
- 좀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탈북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보다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졌음을 느낀다면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은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보임.
- 이들의 실제적 삶의 수준은 북한에서보다 나아졌지만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2. 경제활동 및 소득, 소비수준

■ 경제활동의 의미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은 개인과 가족의 삶을 유지하는 근본적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는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서만이 아니라 남한사회 일반 주민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활 만족도와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짐.

〈그림 3〉 사회경제적 지위 비교 (n=2,419. 단위:%)



■ 경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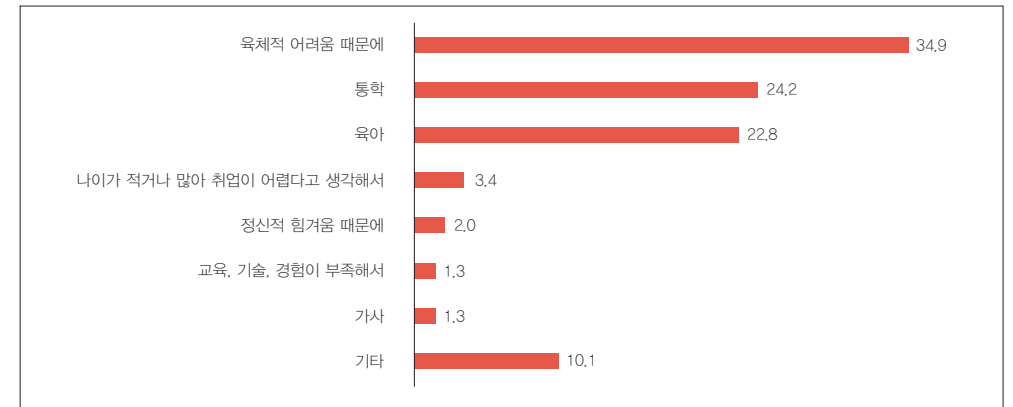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는 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 Social Research가 2006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동일 항목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번갈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재단 소속 상담사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 규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진행과정과 결과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표 3〉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인구 총괄

구 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	실업률 (%)		
		취업자	실업자						
북한 이 탈 주민	전체	403	239	222	17	164	59.3	55.1	7.1
	수도권	261	143	133	10	118	54.8	51.0	7.0
	지방	124	96	89	7	46	77.4	71.8	7.3
2014	전체	400	203	189	14	197	50.8	47.3	6.9
	전체	390	188	165	23	202	48.2	42.3	12.2
일반 국민	2015 전체	43,181	27,082	26,253	829	16,099	62.7	60.8	3.1
	2014 전체	42,728	26,270	25,384	886	16,458	61.5	59.4	3.4

- 2015년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3%(수도권 54.8%, 지방 77.4%)로 일반국민 62.7%와 비교하면 3.4% 낮은 수준.
-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48.2%, 2014년 50.8%, 그리고 2015년 59.3%로 최근 증가추세를 보임.
- 고용율과 실업률은 55.1%, 7.1%로 일반국민 60.8%, 3.1%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일반국민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의 취업과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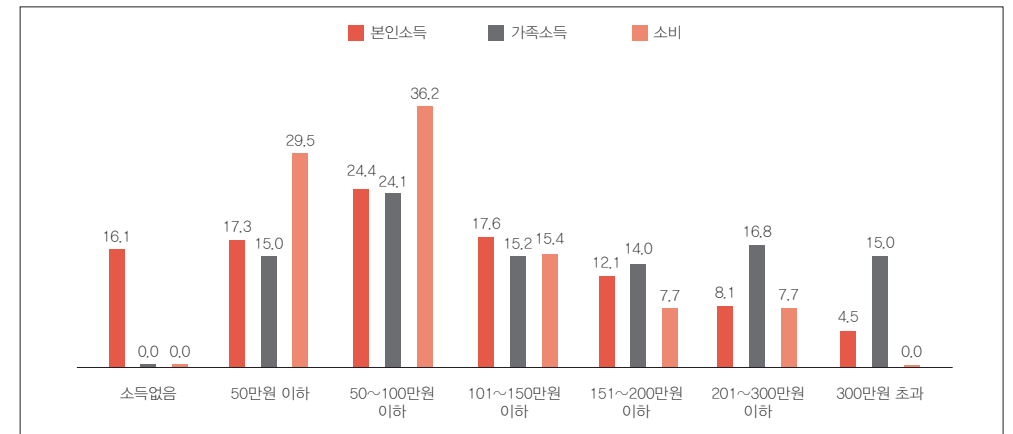
〈그림 4〉 경제활동(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n=149, 단위:%)



■ 경제활동 하지 않는 이유

- 북한이탈주민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몸이 불편해서’ 34.9%, ‘통학’ 24.2%, ‘육아’ 22.8%로 신체적 건강과 진학 및 육아가 높은 비율을 보임.
 - 진학이나 취업준비, 그리고 육아는 일반국민들도 높은 비율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몸이 불편한 사유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특별하게 제기되는 사유임.
 - 이들은 재북시 식량부족과 경제적 곤란, 그리고 탈북과정에서의 신체, 정신적 위협과 충격 때문에 국내 입국 이후에 신체적 고통과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그림 5〉 개인, 가족소득과 소비 규모 (n=398/394/393, 단위:%)



-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지 않고 경제활동 참여자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건강회복을 위한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개인소득과 저축, 생활비**

-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소득(최근 3개월 평균)을 조사한 결과, 월 100만원 이하 57.8%이고 200만원 이상은 12.6%에 불과하였으며, 응답자의 평균 가족 구성원수가 2.3인인 가족의 1개월 수입도 100만원 이하인 세대가 39.1%이고, 이 중 50만원 이하가 15.0%로, 이들의 경우 법정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적 수준으로 실질 소비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임.
- 개인과 가족의 저축실태를 조사한 결과, 저축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58.3%였으며, 저축하는 비율은 2012년 51.9%, 2013년 52.3%, 2014년 61.2%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였으나, 2015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별 저축액은 월 1~25만 원이 56.6%로 가장 높고, 26~50만 원 20.9%, 그리고 51만 원 이상은 매우 낮으며, 201만 원 이상은 단지 1.0%에 불과함.
 - 이들의 저축액이 낮은 것은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재북가족에 대한 생활비 송금과 잔여가족 입국 비용 등 일반국민들과 다른 소비영역이 크게 존재하는 것도 원인.
-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월 생활비는 51~100만 원 이하 36.2%, 1~50만 원 이하 29.5%, 101~150만 원 이하 15.4%이며, 월 생활비 151~200만 원은 7.7%, 201만 원 이상은 8.6%에 불과함.
- 자동차 보유 비율은 2012년 22.8%, 2013년 29.8%, 2014년 29.2%, 그리고 2015년 42.3%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북한이탈주민의 소득과 저축액은 높지 않지만 자동차 보유와 같은 소비생활에 대한 욕구는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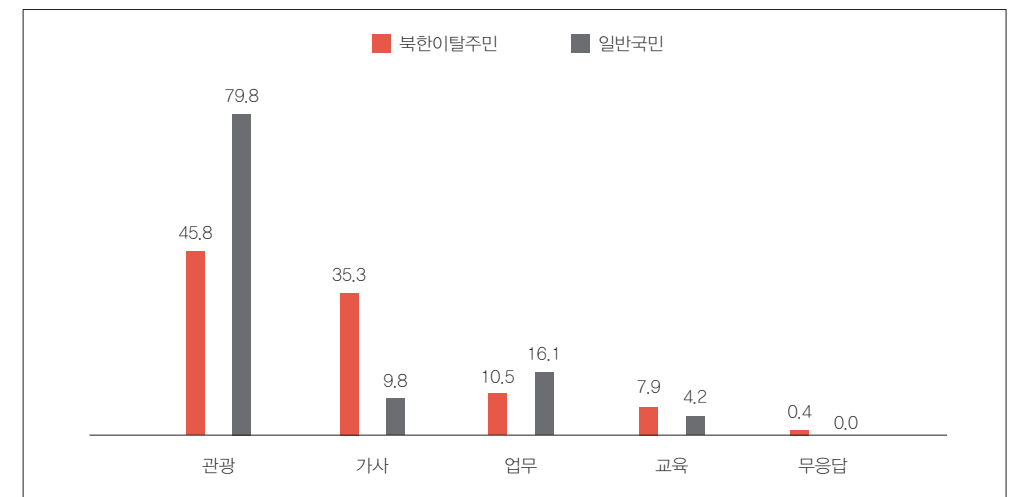
3. 문화와 여가 및 사회참여

■ **여가생활이나 문화생활은 직업적인 일이나 일상생활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을 재충전하는 것으로 일정수준의 시간적·경제적인 여유와 마음의 안정에서 출발할 수 있는 행위**

■ **여가와 문화생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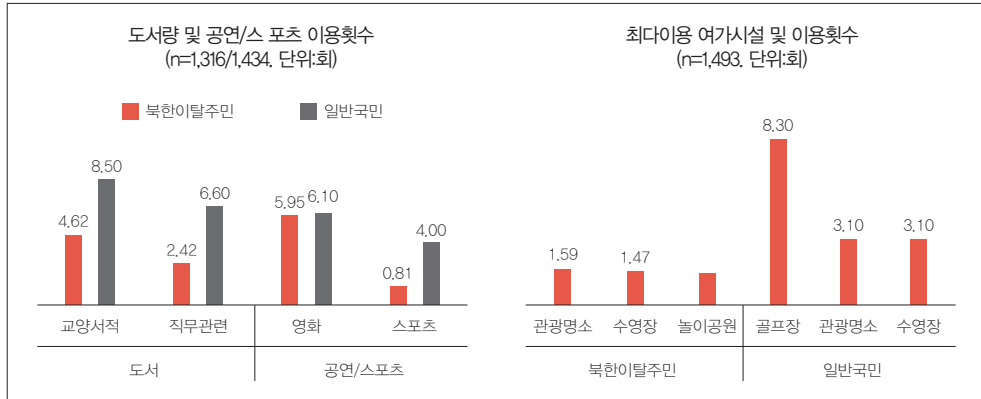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설문결과를 보면, 평소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탈주민의 42.5%는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41.5%가 만족, 15.8%가 불만족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만족의 이유는 '경제적 부담(59.8%)'이나 '시간부족(20.4%)'이 절대다수를 차지함.
-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가본 적 있다는 응답은 14.8%로 통계청의 일반국민 조사의 긍정 답변 비율 19.7%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해외여행의 목적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관광(45.8%)이나 가사(가족·친지방문 등 35.3%)로, 일반국민의 관광 79.8%, 교육(어학연수 포함) 16.1%의 목적과는 내용적인 차이를 보임.

〈그림 6〉 지난 1년간 해외여행 목적 (n=360. 단위:%)



- 독서량, 공연/스포츠 이용 횟수, 여가시설 이용 횟수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반국민이 북한이탈주민 대비 높은 수준의 경험 비율을 보임.

〈그림 7〉 문화와 여가 부분 이용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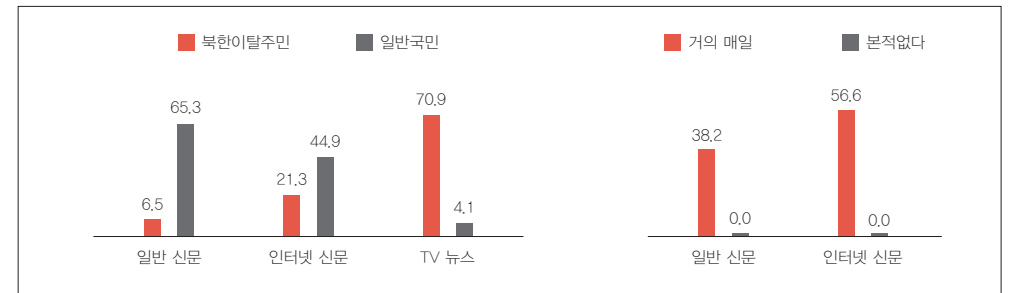
- 도서종류나 공연/스포츠에서 선호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여가시설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 조사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임(북한이탈주민 1순위 관광명소, 2순위 수영장/일반국민 1순위 골프장, 2순위 관광명소).

■ 신문, 뉴스 시청 수준

- 문화와 여가 부분의 설문조사에서 또 다른 대비를 보이는 부분은 지난 1개월간 신문/뉴스 시청 정도에 대한 결과값으로 일반신문과 인터넷 신문 모두 일반국민은 ‘거의 매일’(38.2%, 56.6%) 본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본 적 없다’(65.3%, 44.9%)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 최근 독서량이 줄어드는 대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핸드폰이나 휴대용 전자매체들이 증가하면서 전자매체를 통한 지식습득이나 여가활동이 늘었지만, 전자매체들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의 매체 활용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각 가정에 보편화된 TV를 통한 뉴스를 ‘거의 매일’ (70.9%) 시청하는 결과를 보이며, 주말이나 휴일에 대체로 TV 시청(40.8%)이나 수면 등의 휴식활동(19.7%)을 하는 비율이 2/3를 차지하며, 자기개발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비율은 17% 수준임.

〈그림 8〉 신문/뉴스 시청 정도 (n=2,419,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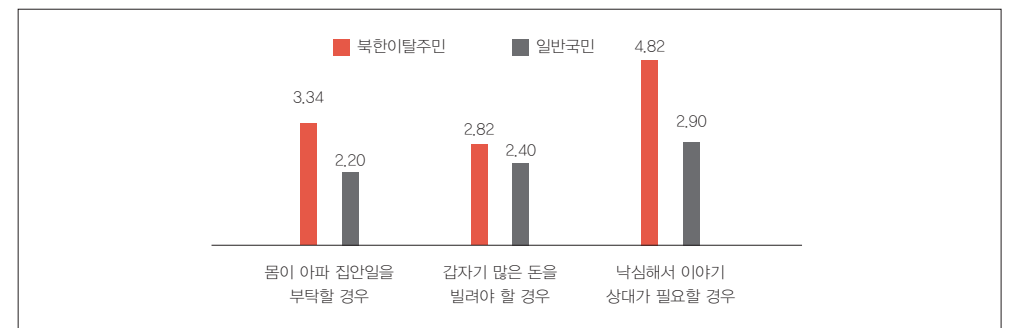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볼 때 양적인 여가시설 이용횟수나 체험 빈도와 질적으로 체험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빈약함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여가생활 만족도 비율은 일반국민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사회 관계망과 사회 참여 실태

- 북한이탈주민에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한 결과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3.34명, 낙심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4.82명,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2.82명으로 일반국민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23.3%로 일반국민 18.2%보다 높은 수준이며,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봉사활동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네트워크의 지지 속에서 갖는 안정감은 정부나 민간의 적극적인 정착지원 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음.

〈그림 9〉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n=2,419, 단위:명)



-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87.2%에 이르며, 가입한 경우에도 소극적인 참여(38.8%) 수준.
- 종교단체나 친목 및 사교단체 등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25.0%로 일반국민의 48.9%의 절반수준.
-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참여수준이나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고, 이들의 높은 만족도는 앞으로의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다만, 북한이탈주민과 통계청의 일반국민 응답결과 비율을 단순화하여 수치만으로 비교해서는 그 이면의 내용을 간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필요.
 - 북한이탈주민들이 표현하는 만족의 수치가 일반국민의 그것과 같은 의미일지, 북한에서 오랜 시간 체득된 경험과 비교되어 상대적으로 주어지는 만족감인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상대적인 만족감과 함께 이들이 일반 국민으로서 절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의 차이를 좁혀나가야 할 것임.

4. 재북, 재남 연계 및 사회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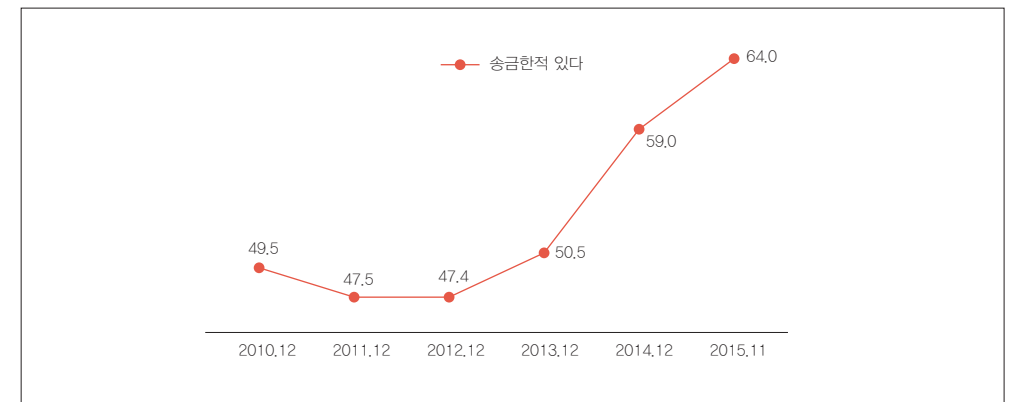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동기나 그 형태가 시기마다 일정한 특징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어려움은 항시 존재함.
- 여전히 식량부족이나 경제적 고통으로 탈북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제3국에서는 신변 불안과 새로운 희망을 찾아 한국에 입국하지만,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기인하는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이와 차별, 가족과의 이별이나 이주과정에서 오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됨.

■ 재북 가족 송금

-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의 경제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탈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을 가족을 위해 브로커를 통한 대북송금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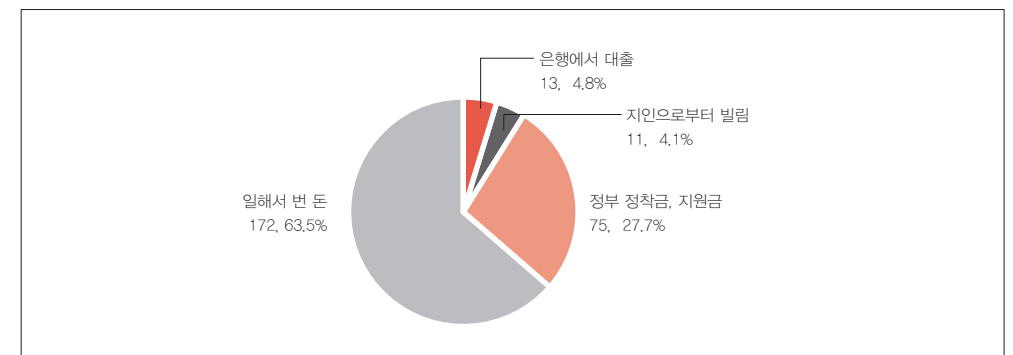
- 브로커는 보통 송금액의 20-30% 가량을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북한내 가족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공식적인 해외송금이 아닌 관계로 브로커에 의해 사기를 당하거나 가족에게 전달된 이후에 북한 보위부 등에 의해 회수당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남.
-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15년 경제사회실태조사에서 64.0%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으로 송금을 했거나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되는 추세임.
 - 송금한 적이 없다는 36.0%의 응답자들은 송금할만한 돈이 없거나(38.4%), 송금해줄 가족이 더 이상 북한에 없어서(31.2%) 송금하지 않는다고 응답.

〈그림 10〉 대북 송금 비율



- 북한으로 송금하기 위한 비용마련 방법으로는 본인이 직접 일해서 번돈이 60.4%로 2/3 수준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정부의 정착금이나 지원금이라는 응답26.3%.

〈그림 11〉 송금 비용 마련 방법(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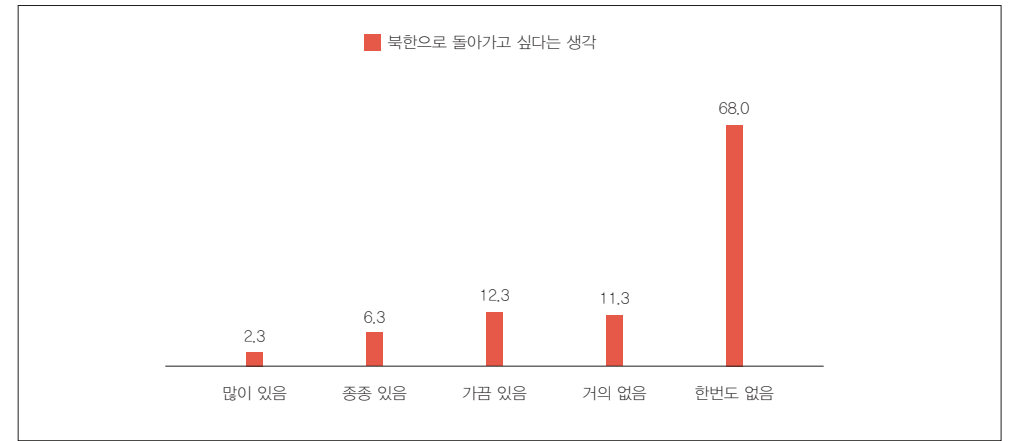


- 송금은 대부분 북한 가족의 생활비 지원요청에 따른 결과이며, 그 규모는 1회 평균 213만 원 가량으로 추계됨.

■ 재북 가족 연계

- 재북 가족이나 친척, 친구와 연락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52.1%의 북한이탈주민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47.4%가 연락중이라고 응답.
- 특히 대북 송금 및 전달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45.6%)이나 가족 등 지인의 안부를 묻기 위한(44.4%) 목적으로 북한 내 연락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90%.
- 북한이탈주민의 절반수준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연락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재북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 다양한 정착의 애로점 또는 북한의 공작으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이 이슈화됨.
 -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로 밝혀진 2000년 이후 재입북 북한이탈주민은 16명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 4명은 다시 국내로 재입국했음.
 -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이후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8.0%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응답하였고, 20.8%는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
 - 이들이 재입북을 생각해 본 이유는 대체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보고 싶어서나 고향에 한번쯤 다시 가보고 싶다는 그리움으로 인한 것임.
-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진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며, 32.0%의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히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거나 여전히 정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적응의 한 부분으로의 이해가 아닌 가족이나 고향에 대한 기본적인 그리움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그림 12〉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n=400, 단위:%)



■ 남북출신 통합과 차별 수준

- 최근 동아일보와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 밀집지역에서 남북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³⁾를 보면 북한 출신 주민의 69.1%, 남한 출신 주민의 62.7%가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
 - 남북주민이 어울리는 과정에서 북한 출신 주민 24%, 남한 출신 주민 6.8%가 서로에게 무시당했다고 응답.
- 2014년 국가인권위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45.6%가 우리사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크다고 응답하였고 16.3%가 편견이 없다고 응답.
 - 남한주민과 다른 말투, 외모,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편견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 필요.

3) <http://news.donga.com/3/all/20160723/79342645/1> 동아일보, 2016년 7월 24일 검색.

Ⅲ 정착실태를 통해 본 시사점과 사회통합 제언

1. 정책적 고려 및 시사점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수준과 방향은 각 시기별 정책 환경이 어떠하였는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환경은 정치적 활용가치, 북한이탈주민 규모, 정착수준 및 사회적 기여도가 중요 변수로 작용함(윤여상, 2012)⁴⁾.
-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환경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이들에 대한 성격규정의 변화, 탈북동기 및 인식 변화, 정책목표(장기, 단기 등) 설정의 변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의미 전환

① 출신성분과 탈북동기 변화

- 북한이탈주민은 그 명칭의 변천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출신성분, 탈북동기, 탈북방법 등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왔음.

4) 북한이탈주민 정착환경 변화와 정책 제언은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2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추가 보완하였음.

- 1950-80년대까지 군인 출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고른 인구학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과거 정치적 이유와 식량문제 등이 주된 이유였으나, 점차 외부 세계의 정보유입으로 인한 한국사회에 대한 기대감과 가족 재결합, 그리고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찾아 이주를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북한의 단속과 중국의 체포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지속될 전망이며, 그럼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정책 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의 특성과 탈북 동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으로 명칭 변화됨.
 - 북한주민의 출신성분과 탈북동기의 변화는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와 정책당국의 성격 규정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성격이 새롭게 규정될 경우 정부의 지원정책 역시 정책대상자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함.
 - 특히 최근 입국자는 생활고와 가족결합을 주된 탈북 이유로 제시하고 체제불만 등 정치적 사유를 제기하는 비율은 낮는데, 생활고를 탈북동기로 제기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응답을 분석하면,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나은 노후보장을 위해서 등과 같이 정치적 난민의 의미보다는 경제적 이주자의 성격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
 -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은 난민, 정치적 박해자, 분단의 희생자 등과 같이 정치적 사유로 인한 탈북상황을 전제로 지원수준과 범위를 결정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주자의 측면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정책이 보완될 필요 있음.

① 사회적 의미의 전환 검토

-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정치적 박해와 경제 붕괴, 그리고 중국의 체포위협과 송환시 처벌 때문에 ‘난민’과 ‘이주자’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으나, 점차 난민의 성격은 낮아지고 ‘이주자’ 성격이 강화될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성격 변화는 탈북 동기의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의 가족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이주민, 사회통합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정치적 활용가치와 규모,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성격을 규정하였으며(윤여상, 2001), 1990년대 이전 냉전체제에서 소규모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체제선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높은 정치적 활용가치를 부여하였는데, 그 결과 당시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유공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

-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와 몰락, 그리고 김일성 사망 등으로 냉전체제는 물론이고 남북한 체제경쟁의 의미가 상실된 상태에서 대규모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정치적 자산이 아닌 국가가 기초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부담과 의무로서의 지원대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임.

〈표 4〉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화

구분	안보 차원 지원기	보훈 차원 지원기	체제선전 차원 지원기	사회복지 차원 지원기	통일대비 차원 지원기	통일대비 지원지원기 (자립 자활중심)
시기	1953 ~ 1962.4. 15.	1962. 4. 16. ~ 1978. 12. 31.	1979. 1. 1. ~ 1993. 12. 10.	1993. 12. 11. ~ 1996. 7. 13.	1997. 7. 14. ~ 현재	2005년 이후 정부의 정책기조
관련법	없음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 원호법	월남 귀순 용사특별 보상법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소관부처	군 및 정보기관	원호처 (국방부)	원호처 → 국가보훈처 (국방부)	보건사회부	통일원 → 통일부	통일부

- 1990년대 정부가 이들을 사회복지 정책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갑작스럽게 지원수준을 낮추게 되자, 이들의 사회 부적응 현상이 심화되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과 정치권을 자극하게 되었으며, 결국 정부는 이들을 사회복지 대상에서 통일대비 차원의 활용 인력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지원수준을 상향 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연간 입국자 규모가 1천~2천 명을 넘어서고, 정부의 지원정책에 의존하는 북한이탈주민 생존 방식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면서, 2005년 이후 정부는 자립과 자활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음.
- 현재까지 정부는 이들을 통일대비차원에서 관리하고 조기에 자립과 자활을 이루어 한국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시혜적 정책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동기의 변화로 이들에 대한 성격을 재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음.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제고

① 적응환경으로서의 한국사회의 인식 검토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정책, 본인들의 적극적인 적응의지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포용과 수용의지가 확립되어 있어야 함.
 - 정부의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준과 범위는 한국사회의 이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인식에 변화(윤인진 외, 2014)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의 개선시 반영되어야 함.
 -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존재감과 성격은 이들 스스로 규정하기보다는 한국의 정치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규정되어 왔음.
 - 1990년대 이전 냉전체제와 남북 체제경쟁이 심화되던 시기에 탈북자는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은 물론이고 북한체제를 비판하고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었음.
 - 당시 한국정부는 이들을 월남귀순자 또는 월남귀순용사로 명명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거나 그보다 높은 지원을 실시하는 등 체제선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그에 맞는 경제적 보상을 하였음.
 - 1990년대 이후 냉전체제의 종식과 북한의 정치 경제적 몰락으로 이들의 체제선전 기능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난과 식량부족으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2002년 이후 연간 1천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정치적 선전 수단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입국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1993년 정부는 이들의 담당부서를 국가보훈처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였음.
 - 이들은 '월남귀순용사'에서 '귀순북한동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가유공자 신분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되면서 정착금과 각종 지원금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당시 한국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을 기본적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생산적 기여자로 인식하지는 않았음.

· 그 후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주무부서를 통일부로 변경하면서 지원수준을 일정수준 상향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보호'에서 '자립과 자활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사회적응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표는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이들을 귀찮은 존재, 세금을 축내는 비생산적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 정치세력들은 중북주의 논쟁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변절자, 쓰레기 등으로 치부하는 사례도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확산은 이들의 사회 적응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에게 좌절감과 상실감을 초래하여 본인 스스로 적극적인 적응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작용하게 됨(윤인진 외, 2014).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인식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을 변절자, 귀찮은 존재, 사회에 대한 생산적 미기여자로 인식할 경우 이들의 사회적 적응은 요원할뿐더러 한국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최근 입국자의 탈북배경은 정치적 이유 이외에, 먼저 온 가족과의 재결합, 가족단위 입국, 자녀교육과 노후보장, 그리고 경제적 돈벌이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입국동기와 배경의 변화는 이들을 월남귀순용사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은 가족 간의 재결합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조건의 선택, 그리고 북한체제에 대한 염증과 반발 심리를 갖고 한국을 찾아온 새로운 민족구성원임.

● 한국사회는 이들이 가족 간의 재결합을 통해서 안정적인 삶의 조건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순한 동정과 경제적 지원이 아닌 자립의 수단과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필요.

· 정부의 지원정책과 한국 주민들의 태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

② 정책목표의 재설정 : '생산적 기여자', '환영받는 이주자'로의 인식 전환

● 한국사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갖고 이들의 사회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경우 이들의 적응 수준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주민,

직장 및 학교동료,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원, 민간단체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함.

● 특히 사회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귀찮고 부담스런 존재가 아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적 기여자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의 '환영받는 이주자', '생산적 기여자'가 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목표는 이들에 대한 자립과 자활 중심의 정책 실현을 통하여 원활하게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적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합리적인 지원제도, 남한사회의 수용 및 포용의 문화 확산,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적응의지가 결합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 정부의 지원제도는 1997년 연간 백 명 미만 입국할 당시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2005년 연간 1천 명 규모에서 수정 보완되어 현재까지 기본적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현재와 같이 연간 1-2천 명 수준의 입국상황에 대한 대비와 함께 향후 수만 명 이상의 규모로 입국할 가능성을 전제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함.

· 현재 1-2천 명 규모의 입국자와 연간 1-2만 명 입국, 그리고 10만 명 이상 입국자 발생 상황은 정책목표 수준이 동일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단기적 차원을 넘어 장기적 상황을 전제로 재편되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규모가 장기적으로 점차 증가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통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설계되어야 함.

● 통일 이전 상황에서 대규모로 남하한 북한이탈주민과 통일 상황에서 북한지역에 남는 것을 선택한 북한주민 상호간에 정부 차원의 지원수준과 혜택에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원수준 설정 필요.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향후 통일 상황에서 남북한 주민의 통합은 물론이고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주민간의 통합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과거 서독의 경우 1989년 대규모 탈출자 발생 이전과 이후 정책적 기조에 큰 변화를 주어 사태를 수습하였으나, 기존의 정책은 대규모 동독 주민의 유입을 초래하였고 그 이후 서독 입국 시기에 따른 지원수준의 차이로 갈등을 유발한 측면이 있음(윤여상, 2001 b)

- 한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정책적 합리성과 효과성 제고 외에도 소규모 유입을 전제로 한 단기적 처방에서 대규모 유입과 통일 상황을 대비하는 장기적 처방으로 전환해야 함.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적응을 위한 남한 주민들의 포용과 수용의 문화가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의 지원정책은 향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수준과 방법에 대한 검토만이 아니라 남한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갖게 되는 편견과 고정관념, 차별적 관념 등을 해소하는데 정책적 주안점 두어야 함.

- 향후 정부 정책은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상호간의 적응과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중점 필요.

- 또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적극적인 적응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데, 북한이탈주민 자신과 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남한주민들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점차적으로 보호와 시혜적 대우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가 되도록 인식을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책목표 재정립 필요.

②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통일대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개선시 이들이 기존 사회구성원들에게 실제적 측면에서 차별과 배제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사회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다른 수혜 대상자들과 형평성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주민,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타 대상자들간의 기회의 평등과 실제적·적극적 평등이 보장되는 방안에 대한 사전 연구와 조사 필요.

-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을 위한 이혼 특례 규정이 신설되어 있으나, 그 외에 분단으로 인한 가족관계와 상속문제 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법률적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거주자에 대한 상속 절차와 심의 등을 포함한 법적 조치 필요.

3) 지원정책, 예산 및 관련 기구의 재검토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1997년 통일부로 주관업무 부서가 이관되면서 조직과 예산, 기구, 그리고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확대는 이들의 입국 규모

가 증대된 것에 큰 원인이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기관의 조직 확대를 추구하는 부처의 이익구조가 결합되어 나타났음.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정부의 관련 조직과 예산, 기구, 관련 사업 진행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전제되어야 함.

- 현재 정부의 주무부처는 통일부가 맡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지방정부 등 수십 개의 정부 관련부처 참여.

- 정부정책의 총괄적 기획과 조정, 집행과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부처간 중복적이고 경쟁적인 사업추진, 기존 사업에 대한 정리 없이 사업과 집행기관의 추가로 인한 난립상,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과 운영과정에서의 민간단체 활동과의 경쟁적이고 중복적인 기능부여, 북한이탈주민 전체 규모와 비교하여 과다한 예산과 사업 집행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함.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추가적인 사업 발굴과 보완의 차원이 아니라 정책대상 재분석, 정책목표 재설정, 예산과 사업의 제로 베이스 평가를 통해서 정부의 담당부서, 서비스 전달체계, 적정지원 수준 및 국내 관련 분야 지원대상자와의 형평성, 정부와 민간의 협동 모델 등을 전면적 재검토 필요.

4) 지방정부와 민간주도로의 이행

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사회적응 연구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들 연구의 공통된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 첫째,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 기존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중앙정부 주도형으로 이루어졌으나, 중앙정부는 총괄적인 기획과 지방정부와 민간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실제적인 역할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 필요.

- 둘째, 정부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 이동, 기존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정부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이후 민간단체의 급격한 증가로 민간중심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진행 보편화 되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공통적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

행, 시설운영을 정부가 아닌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지적하고 있음.

- 셋째, 정책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민관협동형으로의 전환,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정책대상만이 아니라 정책실행의 주체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단체와 지방정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동형으로 전환 필요성 강조.

② 중앙정부 주도 강화 현상 발생

-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이탈주민 정책 관련, 중앙정부주도에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중심으로의 전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그리고 연구자와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공통된 인식으로 볼 수 있었음.
- 현재 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분석하면, 지방정부와 민간으로의 이양이 아니라, 중앙정부 주도형 강화됨.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의욕적으로 시행된 하나센터 운영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능 강화, 제2 하나원 건립, 탈북 청소년 예비학교, 전문상담사 제도 운영 등은 부분적으로 민간단체와 지방정부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기획은 물론이고 사업 진행까지도 통일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 확대와는 반대의 방향.

③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와 민간주도형으로의 전환 필요

-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은 북한이탈주민 입국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비와 사업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
- 현재의 지원정책은 통일부와 하나원, 그리고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중심으로 집행되고,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는 보조적 기관 또는 자율성 없는 하부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변화가 실제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수준 제고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조정과 총괄적 관리 기능 담당 필요.

2. 사회통합과 차별 배제를 위한 제언

1) 북한이탈주민 수용, 조절 또는 거부

①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과 대북정책의 관계 정립

- 북한이탈주민의 발생과 규모, 그리고 이들의 수용수준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기본 틀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대규모 발생 또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발생을 조장하거나 유도할 경우 북한의 체제 붕괴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 것임.
- 현재 한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전원 수용하지만 탈북을 유도하거나 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윤여상, 2001)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수립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핵심적 목표를 수정할 경우 대북정책의 일부가 수정 보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② 북한이탈주민 수용과 조절

- 정부는 탈북자 전원수용 원칙에 따라 국내 입국하는 북한주민을 모두 수용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에 진입하여 실제로 정부의 보호가 가능할 경우 해외에서도 이들을 수용하고 있음.
- 1990년대 후반 이후 재외공관이 탈북자의 한국행 주요 통로가 되면서 한국정부는 체류국 정부와의 교섭, 임시보호와 신분확인 등을 사유로 재외탈북자의 한국행 입국 시기와 규모 등을 상당 수준 조절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확보.
 - 정부는 한국행 희망 탈북자를 명시적으로는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조절함으로써 국내 조사기관과 사회적응훈련기관, 관련 재정적 부담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여건 확보.
-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과 관련 인력의 증원, 그리고 예산 증액 등을 통하여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수준 조절자의 기능을 유지할 것인지 우선적 검토 선행 필요.

③ 북한이탈주민 규모의 조절과 입국 거부

- 재외탈북자 보호와 지원수준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들에 대한 지원인력과 예산을 증액시킬 것인가 현상 유지 또는 감소시킬 것인가? 재외탈북자와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국내외 정책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라서 북한주민과 재외탈북자들은 한국정부가 자신들의 입국을 조절하거나 거부한다고 생각하거나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수용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임.
- 제도 개선 논의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한 한국사회의 합의와 동의를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합의 내용은 곧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선행 자료가 될 것임.
- 중국에 있는 한국 외교공관은 2002년부터 2011년경까지 한국행의 주요 통로로 기능했으나, 2011년 이후 한국행 통로의 기능은 사실상 상실하였으며, 몽골 역시 탈북자 한국행의 주요 경로였으나, 현재는 사실상 폐쇄된 상황.
 - 한국정부는 중국과 몽골 지역을 탈북자 한국행 통로로 재확보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음.
 - 해외 탈북자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지원수준은 불가피하게 북한주민들의 한국행에 대한 유인요인 및 억제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한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수준은 북한이탈주민 입국 규모 결정에 영향을 미침.
- 한국정부는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탈북 사태를 유도하거나 조장하지는 않더라도 북한과 해외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상태에 노출되어 있거나,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및 그 가족, 그리고 기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잔여 가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행을 지원하는 정책적 보완 필요.

2) 특별대상에서 일반대상으로 전환

-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특별대우를 하고 있으나, 특별한 존재로서의 인식이 강할 경우 일반 주민들과의 소통과 사회통합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들이 생계수단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입국하기 때문에 기본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갖는 존재로 인식시키는 것 필요.
 -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은 특별한 존재에서 일반적 존재로 규정될 때 일반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될 것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면제되고 개인적 권리와 요구만을 갖는 존재로 각인될 경우 진정한 사회 통합은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합리적 수준의 의무와 책임 부과 필요.

① 법적 보호기간 경과자 북한이탈주민 명단 제외

-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초기 정착과 자립 자활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법적 목적 달성의 구체적 기한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대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지원항목별 제한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제도는 초기 5년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도록 설계하고, 법적보호기간이 경과된 경우 일반 남한 주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법적 보호기간이 경과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정부관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의 완전한 사회정착 촉진 필요.

② 교육지원(대학특례 입학)제도 개선

- 현행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생활 당시 교육 경험, 교육 결손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대입특별전형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입국시 연령과 관계없이 35세 미만일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 확보 후 5년 이내에 대학 입학에 희망하면 특별입학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태어난 직후 입국하여 남한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하더라도 특별전형 자격이 부여되어 수도권 상위권 대학을 입학하고 학비 전액 면제받음.
- 국내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을 마쳤음에도 특별전형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것은 사회통합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교육지원에 있어서 대학특례입학 기준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대학 입학전 수학능력 평가, 예비대학 운영, 대학 탈락자(무지개청소년센터, 2013)⁵⁾ 예방 및 방

지 제도 등을 추가하는데 주력할 필요 있음.

-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북한이탈주민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이들에 대한 우호적 견해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

③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참여 기회 부여

- 현재 병역법⁶⁾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의무면제의 선택적 배려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병역 이행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함.
 -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입국 후 하나원(사회적응교육시설) 교육과정에서 만 19세-40세 남성일 경우 병역면제신청서(징병검사면제)를 제출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64조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은 ‘강제조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병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부족한 상황임.
 - 사회에 정착한 19세 미만 북한이탈주민은 징병검사연령(만 19세)기에 거주지 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신청서를 송부받아 제출함.
- 실제로 이와 같은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대상으로 행정적, 사회적 인식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병역 대상자 중 다수는 실제로 병역면제를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음.
- 북한 군인 출신의 경우 국군 특별임용제도⁷⁾가 운영되어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 청년의 군복무 사례가 미담으로 언론에 소개됨.
-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갖고 있음에도 병역의무의 1차적 관문인 징병검사 기회도 실제적으로는 보장되지 않음으로서 차별의식의 원인으로 작용.

5) 재학생 대비 탈북 대학생 졸업률 7.8%, 남한 대학생 21%로 3배 수준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6) 병역법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지방병무청장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특별임용) ②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에 대해서는 남한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조사결과 남한 청년의 2/3는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를 찬성하고 있으나, 1/3은 반대함(강동안, 2012)⁸⁾
 -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를 찬성하는 경우 그 이유는 보안상의 이유(63.9%)와 정체성의 혼란(25.2%)이 제시되었으며,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는 ‘남한국민과의 형평성 문제(80.1%)’, 소수자 인권문제(12.8%), 남북한 통일시 걸림돌(3.5%)로 가장 큰 이유로 남한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증가하고 한국의 군복무 기능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될 경우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는 더욱 강화되어 사회통합의 장애가 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 병역문제는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의식 보유, 정체성 혼란과 차별의식 해소 등을 위해서 징병검사 기회를 제공한 후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3) 통일과정에서 지원제도 연착륙 필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는 현재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는 통일 전후과정에서 북한주민과 한국사회,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가에 한국정부의 입장과 정책적 태도를 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장기적 측면에서 보완 필요.
- 북한이탈주민의 대규모 입국사태는 북한사회는 물론이고 한국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으나, 통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측면도 갖고 있으며, 또한 통일 전후과정에서 북한주민의 다수가 북한지역을 이탈하여 한국으로 이동할 경우 통일 한국의 국가개발전략과 남북사회통합 전략은 큰 장애를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는 통일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한이 통일과정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필요.

8) 찬성 61.8%, 반대 38.2%.

4) 분리에서 통합으로

-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서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어 개별적인 지원체계와 지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특히 통일 대비 차원에서 이들을 특별한 존재로 계속 규정하는 것은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향후 사회갈등 요인을 양산할 가능성 높음.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특별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은 일반적 적응과정을 경험하도록 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적응과정은 주류사회인 한국 일반 시민사회의 공개적이고 공통된 사회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통합보다는 분리교육, 분리 사회화 정책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원의 교육과정을 폐쇄식 집체형 교육에서 개방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북한이탈주민들과 남한주민들의 접촉면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북한이탈주민 학생만을 위한 학교보다는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필요.
 - 북한이탈주민과 청소년들은 보수교육 및 개별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교육 분야의 새로운 교육 수요계층이고, 이와 같은 새로운 교육적 수요 발생시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 교육계는 시범적 교육현장 운영하고 있음.
 - 전국 시도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부설학교, 그리고 특수목적 지정학교에 탈북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이들 학교는 방과후 학교, 보충수업 등을 통해서 이들의 학습결손 등을 지원하면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일반학급에서 동등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분리교육이 갖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청소년 교육은 물론이고 하나원과 하나센터 교육프로그램, 성인의 직업훈련, 재사회화,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모든 관련 교육과 지원정책 수립시 남한 주민과 통합교육 및 통합적 체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아닌 기존의 남한주민 대상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집중 필요.

5) 기존 지원 및 전달체계 통합 활용

-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교육 수료 이후 지역사회에서 하나센터, 정착도우미,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 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전문상담사,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민간단체의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특별보호와 지원 받고 있음.
- 하나원과 정부차원의 일부 보호조치를 제외하면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서비스 체계,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이러한 지원체계는 향후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할 경우 대응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고비용 구조이면서 북한이탈주민만을 분리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지 않고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기존 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복지전달체계,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대하여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6) 통일리더 양성과 성공적 정착의 우선 순위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사회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 전후과정에서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내외 관련 단체들은 통일리더 양성 교육,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등 북한이탈주민 성인과 대학생, 청소년 대상 교육 집중적 실시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일차적 역할은 한국사회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이 되어야 하기에 통일 전후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여는 한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 이후 단계에 있는 대상 중심 진행 필요.
 -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능인, 전문가, 자영업자 등 안정적 정착을 우선적으로 이룬 후 통일의 리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IV 맺음말

-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3만여 명이 입국하였으며, 향후 5만 명, 10만 명 이상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이며,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하에 생활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은 위의 법률에 의하여 사회적응교육, 주택 제공, 직업훈련, 의료지원, 교육지원, 고용지원, 정착금 지급,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연금의 특례적 지원 등 정부로부터 5년간 초기 정착지원을 받고 있음.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자는 시드머니를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제도인 '미래행복통장' 서비스를 받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일부와 관련 정부기관, 그리고 민간의 지원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일반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취업률, 소득, 재산 보유현황에서 일반국민과 많은 차이를 보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인식도 점차 부정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사회통합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력을 제고시키고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주도형 정착지원체계를 민관협동형으로 전환해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와 남한 주

민들과 형평성 문제 해소를 적극 추진해야 함.

-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 규모와 성격변화, 그리고 북한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남북한 사회통합과 남북 주민들의 공동생활을 염두에 둔 정책적 설계와 집행이 요구됨.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적 지원과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그리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적응노력이 함께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수준에도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지만, 지역사회 남북한 출신간의 차별과 편견에 대한 상처가 크고, 사회통합적 노력보다는 분리와 배제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제고되어야 함.

참고문헌

- 강동완. 2012.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 징집대상 연령층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28(2)호: 241-285.
- 김상균. 1994. “점검과 지향: 우리의 수용태세와 장기방안”, 「북한탈출동포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41-52.
- 남북하나재단. 2015.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I」 남북하나재단.
- 무지개청소년센터. 2013. 「탈북 청소년의 진로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 자료집.
- 박성재. 2012.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통합제고를 위한 취업지원제도 개선방안.” 「월간 노동리뷰」 10월호: 91-109.
- 박윤숙. 201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와 과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10 No.12: 823-839.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5.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5. 「2015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I」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윤여상. 2001.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도서출판 세명.
2001b. “독일 이주민 정책에 관한 연구.” 「북한학보」 26집: 179-221.
2002. 「통일시대 북한주민의 남한생활-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세명.
외. 2005.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 북한인권정보센터.
외. 2008. 「북한인권 문헌분석」 북한인권정보센터.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내부자료)」 북한인권정보센터.
외. 201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 정착금 지급방식 개선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연구」 제2호: 41-79.
2014.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와 과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통일 논의의 현재와 가능성」: 41-56.
- 윤인진. 2007. “북한이주민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착지원방안.” 「아세아연구」 50(2): 106-143.
2009. 「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집문당.
외. 201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임순희 외. 2015. 「2014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북한인권정보센터.
- 이수정. 2014. “집착지대와 경계의 (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현대

북한연구」 17(2): 85-126.

- 전우택 외. 2010. 「통일실험, 그 7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살이 패널연구」 한올아카데미.
-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통일부 홈페이지. 2015년 5월 28일 검색.
-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57&mode=view&cid=42832>. 통일부 홈페이지. 2015년 5월 28일 검색.
-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통일부 홈페이지. 2016년 7월 22일 검색.
- <http://news.donga.com/3/all/20160723/79342645/1>. 동아일보. 2016년 7월 24일 검색.

제2장

탈북민과 트라우마

탈북과정의 인권침해 경험과 트라우마 치료지원정책

통일연구원 이상신

90년대 이른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후 남한으로 유입되는 탈북민들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 3만명에 달하고 있음.

탈북자들은 북한의 거주 기간 중 지속적인 폭력과 강압에 노출된 경험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음. 또한 탈북 과정 중에서도 인신매매 및 복수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강제노동과 성폭력 등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 이러한 경험 때문에 탈북자들은 PTSD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탈북민들이 겪는 PTSD는 이후 정착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

즉, PTSD의 문제는 탈북자 개개인의 정신적 어려움 문제일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남한 사회 통합의 문제로 보아야 함.

탈북민들의 PTSD 치유는 이들의 무너진 사회연결망을 복원하고, 그 속에서 신뢰적 관계와 지지, 공동체 구성원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탈북민들이 개방적인 사회적 연결망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은 PTSD 치료 뿐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남한 사회 적응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앞으로는 한국 사회의 일원이자 독립된 주체적 개인으로서의 탈북민을 상정하고, “우리”와 “탈북민”을 구별하여 접근하는 연구가 아니라 “우리 안의 탈북민”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려는 학문적 시도가 필요함.

I 들어가며

- 90년대 이른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후 남한으로 유입되는 탈북민들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 3만 명에 달하고 있음.
- 탈북민들은 북한에서의 경험 및 탈북과정에서의 고난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신체적 충격을 받는 일이 빈번하며, 이러한 심리적 외상은 많은 탈북민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여러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 탈북민들의 PTSD는 자유와 더 나은 삶을 찾아 목숨을 걸고 남한을 찾아온 탈북민들이 정착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 앞으로도 탈북민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자연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이들의 숫자는 한순간 급증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이들의 PTSD를 치유하고 한국 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는 방안을 찾는 일이 시급함.

- 이 글에서는 PTSD 극복 방안으로 사회적지지 강화 및 사회적 연결망 참여를 제시할 것임.
- 이 글은 우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탈북자들이 심리적 외상을 입는 주요 경로 - 북한 거주시의 경험, 탈북 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 남한 입국 이후의 적응 스트레스 - 들을 소개할 것임
- 이후 PTSD 치유 자원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 극복의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적 지지와 연대의 중요성을 제시할 것임.
-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글을 마무리 할 것임.

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는 1990년대 미국의 걸프전 이후 새롭게 정의된 정신질환으로, 일반적으로는 “전쟁, 화재, 각종 사고 및 개인적인 피해를 끼치는 강간, 폭행, 테러, 폭동 등 생명을 위협하는 정신적, 신체적 외상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질환(김재엽 외 2012, 347)로 정의됨.
-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¹⁾에 따르면, 정신적·신체적 외상의 직접 경험뿐만 아니라, 그 외상의 간접적 경험,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지의 사망 목격 경험 등이 PTSD를 유발할 수 있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 ‘심리적 외상’은 “심각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되며, ‘외상사건(traumatic event)’이란 심리적 외상을 가져온 사건으로, 그리고 외상사건의 체험이 ‘외상경험’이라고 정의됨. 피해자 본인과 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신체적 안정이나 심리·정서·사고 체계의 안정성을 위협한 모든 사건”을 외상사건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정윤경·김희진 2014, 145).
- 특히, 자연재해 등이 아니라 외상이 사람에게 의해 가해진 경우, 즉, 강도나 폭력, 고문 등의 외상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PTSD를 앓는다는 연구가 있음(김재엽 외 2012; 송창진 2004; 오유진 2006).

1) 일반적으로 DSM-IV라고 지칭되는 서적이다. 정신질환의 진단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 기존의 PTSD에 대한 연구들은 PTSD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 중인 캄보디아 난민들의 PTSD를 연구한 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 입국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전체 연구 대상자의 86%가 PTSD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Carlson and Rosser-Hogan 1991).
- 즉, PTSD는 단기간에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며,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증상이 지속될 수 있는 정신질환임.
- PTSD는 특히 환자의 사회생활 및 직장근무,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침.
- 예를 들어, 김현경(2009)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자신의 외상경험 때문에 같은 북한출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 “북한이탈주민을 만나게 되면, 개인의 과거 외상 경험이 떠올라 고통을 확인하게 됨으로 심리적인 상처만 깊어질 뿐이다. 한국에 들어온 동기, 북한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수감원들간에 폭력행위, 자아비판과 호상비판을 통한 상호 공격성, 중국으로 건너가 살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등은 북한이탈 주민이라면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만의 역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사실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남한에 입국하면서 더 이상 그러한 사실들의 확인을 통해 자신의 과거 외상경험의 고통을 확인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각자 처한 현실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한다. 그러나 주변의 북한이탈주민 역시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같은 북한출신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인식 면에서, 능력 면에서 부족함이 많다. 그러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같은 북한이탈출신과의 만남을 꺼리게 된다. 반면 낮은 현실에 흡수될 수 없는 개인의 입장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끼리 모이게 되나 정서적 공허감을 메우기 위한 만남의 수준에 그치고 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경 2010, 97)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PTSD의 진단 기준은 아래와 같음. 아래의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증상으로 인해 사회생활 및 직장에서의 의미 있는 기능감퇴가 있을 때 PTSD로 진단받음.
 - 외상사건에의 노출

- 자신이나 타인의 죽음, 중상을 초래할 만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보았을 때
- 강한 공포심, 무기력감, 전율을 느낄 때
- 아래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외상사건이 지속적으로 재 경험될 때
 - 상상, 생각, 지각으로 그 사건을 반복적으로 괴롭게 회상. (어린이의 경우 외상이 담겨 있는 놀이를 계속한다)
 -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괴로운 꿈
 - 마치 그 사건이 일어난 듯이 행동하거나 느낌. (착각이나 환각 등)
 - 외상사건과 유사한 내적, 외적 자극에 대한 심한 심리적 괴로움
 - 외상사건과 유사한 내적, 외적자극에 대해 생리적 반응
- 외상과 관련된 자극을 지속적으로 피하며, 일반적인 반응성의 마비
 - 사건과 관계되는 생각, 느낌, 대화를 피하려고 함
 -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활동, 장소, 사람을 피하려고 함
 - 사건의 중요한 면을 회상할 수 없음
 - 중요한 일들에의 참여와 흥미가 뚜렷하게 감소됨
 - 타인으로부터의 소외감
 - 감정표현의 제한
 - 장래를 비관적으로 생각
- 각성상태의 증가
 - 잠을 못 이루거나 깊이 못 잠
 - 흥분을 잘하거나 화를 잘 냄
 - 집중력 곤란
 - 과도각성
 - 쉽게 놀람

생하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정서적 충동조절의 변화, 주의력의 의식의 변화, 자기인식의 변화, 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타인과의 관계변화, 신체화 증상, 의미체계의 변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음.

■ 정윤경과 김희진의 연구(2014, 147)에서는 PTSD를 “대인관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

Ⅲ 탈북자들의 심리적 외상

■ 탈북자들은 북한의 거주 기간 중 지속적인 폭력과 강압에 노출된 경험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음. 또한 탈북 과정 중에서도 인신매매 및 복송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강제노동과 성폭력 등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 이러한 경험 때문에 탈북자들은 PTSD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기존 연구들은 탈북자들의 PTSD 발병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김재업 외 2012; 서주연 2006; 오유진 2006) 오유진(2006)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민의 절반 이상이 PTSD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서주연(2006)의 조사에서도 탈북민 45.1%가 PTSD 위험군으로 조사되었음

■ 강성록(2001)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의 비율 분포는 아래와 같음

- 공개처형 장면 목격: 86.3%
- 아사자 목격: 85.3%
- 구타장면 목격: 75.8%

- 정치적 과오로 인해 처벌받는 사람 목격: 67.4%
- 가족 등의 질병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주지 못한 경험: 63.2%

■ 또한 같은 연구(강성록 2001)에서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의 비율 분포는 아래와 같음

- 발각의 두려움: 84.2%
- 낯선 경험에 대한 두려움: 84.2%
- 북한의 검열: 60.0%
- 중국 국경수비대의 검열: 55.8%
- 사격을 받은 경험: 8.5%
- 가족과의 이별: 14.9%

■ 위에 인용한 서상록등의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것으로, 수십만 명의 아사자를 낳은 90년대 후반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의 경험이 탈북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함. 그러나 최근의 외상경험 연구에서도 심리적·신체적 충격등 외상사건을 경험한 탈북자들의 비율은 결코 적지 않음.

■ 2014년에 발표된 정윤경·김희진의 연구는 “생명의 위협, 가족과의 이별, 수용소 고문, 처형, 성적 폭력, 자연재해” 등 19가지 외상사건 경험을 405명의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음.

- 조사대상 탈북자의 95.1%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19가지 외상사건 유형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을 경험하였다고 답함.
- 중국 등 제 3국 체류 시에 외상사건을 경험한 비율도 58.3%에 달했음.
- 북한과 제 3국 체류 시의 외상경험을 합하면, 405명의 탈북자중 96.5%인 391명이 외상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탈북민들은 거의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외상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같은 연구에서 1인당 평균 외상경험 숫자는 7.7개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외상사건을 경험하고 있었음.
- 물론 모든 외상경험이 PTSD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 연구에서 7개의 PTSD 증상 유무를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하나 이상의 증상을 겪고 있었음.

〈표 1〉 PTSD 하위차원별 실태

PTSD 하위차원	증상없음	증상있음
1. 정서 및 총동조절기능의 변화	19.3%	80.7%
2. 주의력과 의식 기능의 변화	34.8%	65.2%
3. 자기인식의 변화	41.0%	59.0%
4. 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63.0%	37.0%
5. 대인관계 변화	35.3%	64.7%
6. 신체화 증상	27.9%	72.1%
7. 의미체계의 변화	73.8%	26.2%

※ 출처: 정윤경·김희진(2014) p.157에서 재구성

■ 그러나 이러한 외상경험이 꼭 남한에서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님. 이러한 외상경험이 PTSD를 유발할 경우에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정윤경·김희진 2014). 즉, 외상경험이 모두 PTSD로 전화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는 개인차가 존재함. 따라서 단순히 외상경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상경험이 PTSD로 이어졌는지를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함.

■ 한반도평화연구원의 2008년 연구에서는 고문을 비롯 다양한 외상사건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을 7년간 종단연구해본 결과, 이들의 우울이 만성적(chronic) 수준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음.

■ 아래에서는 탈북민들의 심리적 외상경험을 (1) 북한 거주시의 경험; (2)탈북 과정시의 경험; (3) 남한 이후의 경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임.

1. 북한 내에서의 심리적 외상경험

■ 통일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북한 교화서」는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이 주로 송환되는 전거리 교화소와 개천 교화소의 실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한동호 외 2015).

■ 탈북민들을 인터뷰하여 재구성된 보고서의 내용은 탈북민의 심리적 외상경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

■ “교화소”는 한국의 “교도소”에 상응하는 교정시설로, 북한의 사법기관에서 노동교화형(한국의 징역에 해당)을 받은 사람들이 수용됨.

■ 교화소 수용경험이 있는 탈북민은 밀수 및 절도, 빙두(마약의 일종)거래를 이유로 수감된 경우도 소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은 도강을 이유로 강제 송환되어 교화소에 수감됨.

■ 교화소에서는 보안원 및 경비대원, 반장 등에 의한 구타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내부질서 위반의 경우, 급식처벌(식사배급량을 절반으로 줄임), 대기처벌(밤새 불침번), 독방처벌(1주일간 독방 수감), 면회가 금지되는 낙후자반 수감 등의 처벌을 받음.

■ 고문은 단발적인 폭력의 경험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 이는 “감금과 수감으로 인해 자유의지가 박탈된 무력한 상태에 있는 개인에게 권력조직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김현경 2010, 84)”이기 때문.

■ 고문이 끝난 후에도 고문의 피해자들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됨. 정의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자신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지배되는데, “특히 인권을 유린한 고문 집행자가 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사회적 불의를 심하게 느낀 사람은 이후 사회생활 속에서도 심리적 문제를 겪기 쉬움(김현경 2010, 84)”.

■ 열악한 식량환경 때문에 교화소 수용자들은 식량을 외부의 가족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데, 면회가 금지되는 낙후자반에 수감되면 이 도움이 불가능해짐. 또 낙후자반은 노동강도가 몹시 세서, 많은 탈북민들은 낙후자반 수감이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증언을 하고 있음.

- 교화소에서는 도주 혹은 교화소 내 살인 등의 이유로 총살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수감자들은 총살된 시신을 강제로 목격하게끔 강요되고 있음. 그리고 수감자들은 시신을 목격한 후의 느낌을 글로 써 내도록 강요당하며, 이에 따라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됨.
-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많은 수감자들이 사망함. 또 경비대와 계호원의 구타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음.
- 증언에 따르면 “보통 하루에 1~2명이 영양실조, 가혹행위, 질병으로 사망하고 특히 교화소에서는 결핵이나 열병과 같은 전염병이 매해 2~3달가량 발생하는데 전염병이 발생하면 하루에 30~50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함(한동호 외 2015, 21).
- 교화소 내 사망자들은 가족들에게 통보도 되지 않은 채 보관되었다가 “불망산”이라 지칭되는 화장터에서 매주 월요일에 일괄 화장 처리됨. 이 시신처리 과정에서 시신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음.
 - “남자나 여자나 죽으면 지하에 넣어둔다. 그러다가 많이 차면 대차로 실어서 불망산에 가져간다. 남자들이 대차를 끌고서 나가는데 하루에 6차 나간 적도 있다. 그 불망산에 가면 남자들이 시체를 대차(大)로 펼쳐서 팔, 다리를 다 자른 후에 통안에 넣는다. 시체를 통나무에 넣어서 가지고 올라가야되는데 잘 안들어가니까...사람 너무 많이 죽어서 (화장을 하면) 재가 나오지 않는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선생님들도 하는말이 ”봐라. 너네 일하기 싫어하면 저렇게 된다“고 말한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다.”(한동호 외 2015, 21~22)
- 교화소나 탈북 등 극단적 경험이 아니더라도, 북한은 남존여비의 유교적 전통이 엄존하는 매우 보수적인 사회임.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가정 내 폭력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임. 따라서 탈북여성, 특히 북한 내에서 결혼을 경험한 여성들은 대부분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마찬가지로 탈북자들의 미성년 자녀들 또한 부모 사이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음.
- 중국에 인신매매 등으로 팔려갔다가, 임신한 몸으로 북한에 강제 송환되는 여성들의 경우, 강제 낙태당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북한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때문으로, 중국인의 핏줄을 이은 아이들이 북한의 혈통적 순수성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임. 이 과정에서 강제낙태 당하는 여

성들은 불결한 환경과 불충분한 치료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후에도 신체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음. 특히,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낙태를 당했다는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입는 경우가 많음.

2. 탈북 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경험

- 탈북과정에서 특히 여성들이 인신매매나 성폭력 등의 폭력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는 탈북민 여성들의 PTSD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많은 탈북민들은 탈북 직후 남한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10년 이상 중국, 러시아 등 제 3국에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 도강 과정 자체도 목숨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여정으로, 대부분의 경우 국경경비대를 매수하기도 하지만 발각될 경우 본인과 가족의 생명이 위협해질 가능성을 안고 있음.
-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심해져, 탈북과정에서의 공포와 스트레스가 정신적 외상의 한 근원이 되고 있음.
- 탈북과정에서 실패하여 체포되는 경우, 극도의 폭력의 대상이 되고 교화소 등에 수용됨.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화소는 원래 남한의 교도소에 해당하는 교정시설이지만, 북한의 교화소는 열악한 시설과 구타, 힘든 강제 노동과 인권침해 등으로 장기간 수감될 경우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시설임.
- 많은 북한 탈북민 여성들은 중국의 한족에게 돈으로 매매당하는 인신매매 경험을 가지고 있음.
 - 미혼의 가난하고 나이많은 한족 남성들이 얼마간의 댓가를 지불하고 브로커를 통해 북한 여성들을 인신매매하는 경우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음.

- 많은 경우 북한 여성들은 중국에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는 꼬임에 빠져 브로커를 따라 나섰다가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증언.
- 혹은 인신매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중국에서 중국인의 처로 사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하는 경우도 있음.
- 이미 북한에 남편과 자식이 있는 경우에도 인신매매를 당하여 중국인과 강제 결혼하게 된 북한 여성들은 가족의 해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됨.
- 돈을 주고 신부를 구입한 중국인들은 탈북민 여성들을 재산의 일부로 간주, 많은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여성들을 집안에 감금함.
- 이렇게 인신매매 당한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 강제로 결혼을 당한 상태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언제라도 북한에 돌려보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함.
- 결혼한 후 아이를 낳고 적응하여 살게 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은 중국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따라서 이들의 법적 지위는 항상 불안하며, 중국과 북한 양쪽에서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안한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음.
- 북한과 남한은 아직도 여성의 성적 정절을 중요시하는 유교적 문화가 남아있는 보수적 사회라는 공통점이 있음. 이 때문에 인신매매에서 탈출하여 남한으로 오는데 성공한 여성들도 자신들의 이 불행한 과거를 남들 앞에서 밝히고 싶어하지 않음. 이는 PTSD 치료의 거부로 이어져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음.

■ 김현경(2010)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민 여성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북한에 자녀가 있을 경우, 기존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그리고 과거 북한이나 중국에서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 고문으로 인한 PTSD를 앓을 확률이 높았음.

3. 남한 거주 이후의 스트레스

■ 성공적으로 남한에 도착한 탈북자들도 이후 새로운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데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림.

■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전반적으로 높은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여성보다 남성의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음”으로 나타나고 있음(한샘 외 2011, 211).

〈표 2〉 생활사건 스트레스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X ²
지난 1년간 직장상사(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59.3	68.1	53.9	6.28
지난 1년간 근무시간이나 직장에서의 책임이 크게 늘어났다	53.9	61.1	49.8	3.75
지난 1년간 실직하였다	47.9	63.6	4.5	15.72
지난 1년간 경제적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74.4	73.2	74.9	.11
지난 1년간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친지가 사망하였다	3.3	34.5	27.9	1.58
지난 1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심하게 다치거나 아팠다	61.3	67.6	59.2	2.21
지난 1년간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 부부관계가 힘들었다	41.4	48.2	37.7	3.36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다툼이 크게 잦아졌다	56.1	64.6	51.3	5.36
지난 1년간 자녀가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거나 퇴학을 당하였다	18.2	26.6	13.9	7.54

※ 출처: 한샘 외 2011, 202

■ 표는 2011년 353명의 탈북민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임. 탈북민들은 특히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조사대상의 74.4%가 “지난 1년간 경제적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 답했음.

■ 경제적 스트레스 외에, 가장 많은 탈북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건강에 관련된 것

로, 61.3%의 탈북민들이 “지난 1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심하게 다치거나 아팠다”라고 답하였음.

■ 이러한 경제 및 건강관련 스트레스는 가족관계의 문제로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성적인 문제를 호소한 비율도 41.4%에 달했으며, 배우자와의 다툼이 잦아졌다는 대답도 56.1%에 달함.

■ 이러한 결과는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지탱해주어야 할 사회적 지지(직장에서의 관계 및 가족 관계 등)가 같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음을 보여줌.

■ 즉, 경제적 곤란과 질병이 사회적, 개인적 관계의 악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른 사회적 지지망의 상실은 다시 경제문제와 건강 문제를 다시 악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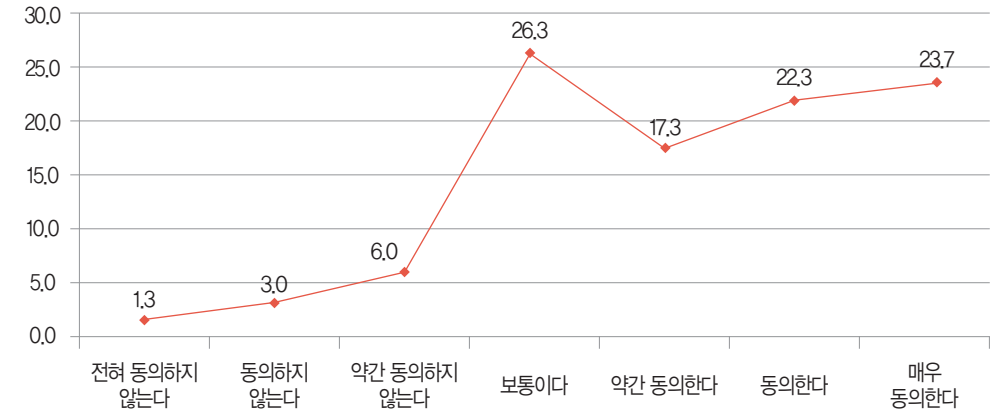
■ 한부모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연구한 조영아 외(2014)의 논문에 따르면, 북한에 배우자를 남기고 자녀만 남한으로 데려온 이들 탈북민의 경우, 가족의 분리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음.

○ “남한에서 결혼한 배우자와의 이혼, 재혼가정 자녀와의 결합과 이별, 제3국 혹은 북한 배우자와의 심리적 이별, 제3국에 두고 온 자녀의 재결합이나 이별, 남한에서 재결합한 자녀와의 재이별과 갈등 등 가족 재결합과 이별을 둘러싼 다양한 상실과 스트레스”(조영아 외 2014, 175)

○ “정서적, 물질적 지지자원의 부족하고 북한잔류가족 및 남한 동거가족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이나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조영아 외 2014, 175)

■ 한편, 통일연구원에서 2016년에 탈북자 300명을 대상으로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라는 문항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63.3%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그림 1〉 삶의 만족도



■ 이렇게 탈북자들은 남한에서의 생활에 일반적 수준에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점에서는 부정적인 답도 있었음.

■ 예를 들어, 아래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남한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을 편견에 찬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를 물었을 때 63.3%의 탈북민들이 대체로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함.

〈표 3〉 북한이탈주민을 편견으로 바라봄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22	7.3
별로 그렇지 않다	85	28.3
대체로 그렇다	149	49.7
매우 그렇다	41	13.7
무응답	3	1.0
Total	300	100.0

■ 비슷한 항목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이등주민이다”라는 문장에 대한 반응을 물었을 때도 역시 절반에 가까운 48.3%가 대체로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함.

〈표 4〉 북한이탈주민은 이등주민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60	20.0
별로 그렇지 않다	94	31.3
대체로 그렇다	102	34.0
매우 그렇다	43	14.3
무응답	1	.3
Total	300	100.0

■ 이런 결과를 보면, 탈북자들은 남한으로의 탈출이라는 자신들의 결정에 후회하고 있지는 않음. 오히려 자신의 삶에 만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동시에 남한 사회에서의 편견과 배척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남한 사회 적응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4. PTSD와 한국사회 통합의 문제

■ 탈북민들이 겪는 PTSD는 이후 정착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

-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외상경험과 이로 인한 PTSD는 남한사회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김재엽 외 2012; 서주연 2006; 정윤경·김희진 2014; 허성호 외 2013).
- 남한의 대학에 입학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허성호 외(2013)의 연구를 예로 들면, 이들의 PTSD 수준과 대인관계 및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이 상관관계가 있었음. 즉, PTSD 가

심할수록 학교생활, 대인관계, 갈등해결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과 사회에 대한 반감이 높고 고립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았음

- 즉, PTSD의 문제는 탈북자 개개인의 정신적 어려움 문제일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남한 사회 통합의 문제로 보아야 함.
- 앞서 소개한 PTSD의 진단기준에도, 사회 및 직장 생활에서의 현저한 기능감퇴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PTSD를 겪는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 치료에 대한 고민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김재엽 등의 연구에 따르면(김재엽 외 2012), PTSD 증세가 심할수록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탈북자 3만 명 시대를 맞아, PTSD를 개인의 의료복지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것일 수 있음.

- 탈북자들이 PTSD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이미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및 세대 갈등 등으로 통합의 문제를 겪고 있는 남한 사회에 또 하나의 사회적 균열을 미리 예방하는 길임.
-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 적응에 실패할 경우, 우리 사회에는 또 하나의 갈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그 경우 탈북자와 남한주민 간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함.
- 따라서 탈북민들의 PTSD 극복은 미래의 갈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어조치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PTSD를 심하게 앓는 사람들은 사회와 이웃에 대한 신뢰를 잃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됨. 이런 측면에서 PTSD는 사회적 정신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음.

■ 따라서 탈북민들의 PTSD 치유는 이들의 무너진 사회연결망을 복원하고, 그 속에서 신뢰적 관계와 지지, 공동체 구성원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IV PTSD 의 극복

- 일반적으로 개인차는 있으나 PTSD는 장기간의 상담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임.
- PTSD에 시달리는 것이 명백한 탈북자들 또한 정신과 치료와 상담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 최근에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나, 남한에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음.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이웃에게 알려질 경우 사회적 지탄과 비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화가 남아 있음.
- 이러한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 때문에, 탈북민들은 남한에 온 이후에도 자신의 문제를 정신과에서 상담 받는 것을 매우 꺼려함.
-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남한의 경우, 무조건 약물과 수술에 의존하는 치료보다는 식단 개선과 운동 등을 통해 몸을 건강히 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그러나 의약문화가 다른 탈북자들은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방식 보다는 오히려 의약품 처방을 통한 단기적 회복을 선호함. 경우에 따라서는 섭식과 생활 습관 변화를 권하는 의사들의 처방

을 탈북민에 대한 차별이라고 받아들여 항의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의약문화의 차이로 인한 일선 병원에서의 문제가 큼.

- 더욱이 PTSD는 경우에 따라 매우 오랫동안 치료와 상담을 받아야 하는 질환이며, 특히 상담기법을 통한 치료를 받을 경우, 탈북민의 평균적 경제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수준의 금전적 부담이 존재함.
- 고문으로 인한 PTSD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성, 외상에 대한 심리적 준비, 정서적 신념, 일에 대한 몰입, 대처방식의 유연성, 생존에 대한 강한 동기, 자기 통제력, 자존감, 현실 지남력, 탄력성, 강인성,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안정애착” 등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음(김현경 2010, 85)
- 이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치료 방식은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임.
- 즉, PTSD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잊기 힘든 고통의 경험과 기억 때문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존감과 안정감을 잃어버린 것임. 따라서 이들은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기능 저하를 경험함. 이들의 인간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신뢰 수준을 높이고, 공동체가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에 자신을 맡기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PTSD 자체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임.

1. 사회적 지지

-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등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가 있음(이민숙 2005; 이영자 · 김태현 1999; Cattell 2001).
-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광의의 의미로 정의될 때 “타인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이민숙 2005; 이영자 · 김태현 1999).

-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는 대인 활동: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감정의 표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인식, 혹은 표현된 관점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상징적 혹은 물질적 도움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음(Diamond 1979, 102).
-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심리적·사회적 부담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감소할 수 있다고 알려짐(이민숙 2005).
- 고문을 경험했던 이라크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 장기간 지속되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음(Gorst-Unsworth & Goldenber 1998; Mahtani 2003). 마찬가지로 터키의 난민들을 연구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고문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감경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Basoglu & Paker 1995; Schweitzer et al. 2006).
-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우울증 혹은 자살충동의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를 통해 탈북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좀 더 원활하게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한샘 외. 2011)
-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는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탈북민으로 구성된 사회적 지지망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긍정적인 시각에 따르면,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이 정서적 교류를 통해 남한사회 적응을 돕는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가 있음(김미령 2004).
- 또 탈북민 지지망을 통해 정보가 유통되고 이를 통해 남한 사회 적응에 도움을 받으며, 가족관계에 미치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음(진미정 외. 2009).
- 선행연구에 따르면, 단독 탈북자보다 가족 전체 혹은 가족 일부가 같이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의 경우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이 좀 더 빠르고 유연함(한인영·이소래 2002).

- 이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자 지지의 기초인인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낮은 남한 사회 적응의 과정을 혼자 견뎌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유라고 보임.
- 또 단독으로 탈북한 이들의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빨리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탈출시켜야 한다는 스트레스 등이 남한사회의 적응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점도 생각해볼 수 있음.
- 이순형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가족과 함께 탈북했느냐가 아니라 탈북한 이후 가족과 함께 공동생활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변수임. 가족과 동거중인 탈북민들은 남한 사회 적응이 쉽고 빠른 경향이 있었음. 특히 미성년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위의 두 연구에서 보여주는 탈북민의 남한사회 적응 여부와 가족 동반과의 상관관계는, 사회적 지지가 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임
- 탈북민 지지망은 긍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도 있음. 탈북민 네트워크는 매우 공고하고 폐쇄적이어서 오히려 남한사회 적응이나 경제적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음(윤인진 2009, 277~303)
- 즉, 탈북민 지지망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탈북민 개인들의 사회연결망의 확장을 가로막을 수 있음. 또 지지망 내부에서의 폐쇄적인 정보는 내부 구성원들의 건전한 정체성의 성장을 저지하며, 외부집단(out-group)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적 태도를 키우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탈북민 지지망을 지원하고 육성하되, 이 지지망이 폐쇄적인 교착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적 성격을 갖지 않고, 외부로 열린 교량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의 성격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혹은 탈북민에 대한 공식적 지지망(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적 도움, 시민·종교단체, 통일부 직원 등)과 비공식적 지지망(가족과 친척, 선배 및 이웃 등)으로 나누어 탈북민의 남한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보는 연구가 있음(한샘 외 2011). 이 연구에 따르면 공식적 지지망과 비공식적 지지

망 모두 탈북민의 남한 사회 적응 및 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2. 사회적 자본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혹은 사회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그것에서 파생되는 상호성과 신용의 규범(norms of reciprocity and trustworthiness)이라고 정의됨(Putnam 2000; 김형국 · 이상신 2012).
- 즉, 한 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그 사회의 개인들이 얼마나 촘촘한 연결망(network)으로 엮여있는가를 뜻함. 개인들은 연결망을 통해 공동체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 사회적 연결망은 소속 개인들의 사회적 · 정치적 참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도 함.
- 나의 복리에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의 시각에서 보자면 부조리한 행동임. 그러나 사회적 자본을 통한 집단행동의 동원은 이 무임승차자(free rider)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
- 개인들은 사회적 연결망 혹은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그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되고 이를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간주하게 됨.
- 퍼트남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1) 시민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 집단 행동(collective action)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2) 집단 간 신뢰와 연대를 강화시켜 사회발전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3) 시민들이 같은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며; (4) 정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개인과 집단의 목표달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김형국 · 이상신 2012, 299)
- 퍼트남은 90년대 이후 미국 사회의 정치참여의 감소는 바로 이 사회적 자본의 약화에 기인한다고 봄. 즉, TV나 컴퓨터 등 개인이 혼자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발달, 도시 주변부로의 중산층 이주에 따른 출퇴근 시간의 증가와 이에 따른 여가시간의 감소가 가족 및 친구와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줄인 것, 그리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90년대 이후 세대의 성향들이 사회적 자본 감소를 가져 왔다는 것.

- 사회적 자본에서 이탈하는 개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사회적 자본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가치 – 신뢰, 우애, 공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애국심 등 – 의 약화를 의미함.
- 특히 사회적 자본의 문제는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신뢰 수준의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사회적 연결망에 참여한다는 것은 같은 연결망 내부의 다른 개인들, 그리고 그 개인들 사이에 교환되는 정보와 집합행동을 신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 즉, 그 집단과 집단의 구성원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집단에 참여할 이유가 없음.
- 헬리웰(Helliwell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수준은 국가적 자살률 및 주관적 행복감(well-being)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 또한 OECD의 2001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높은 국가에서는 (1) 어린이들에 대한 폭력 혹은 방임의 가능성이 낮으며; (2) 범죄율이 낮고; (3) 시민들의 교육수준은 높으며; (4) 정부의 행정효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5) 시민들의 신체적 건강 수준도 높음(Healy and Cote 2001).
- 따라서, 외상경험과 이로 인한 PTSD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치유대책으로는, 전문적 상담 및 약물치료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 수준의 제고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탈북민들로 하여금 좀 더 다양하고 열려 있는 사회적 연결망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임.
 - 남한 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수용
 - 사회적 연결망에서의 정보 교환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부식 시킴

- 또한 정보 교환을 통해 직장 채용, 교육, 사업, 문화 등 다양한 기회에 접근 가능성을 높임.
- 같은 연결망 구성원의 일원으로 남한 주민과 교류하면서 민족적 동질감 확보
-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음.
- 다른 구성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
- 한 번의 시도에 실패할 경우에도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재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킴

V 정책적 제안

■ PTSD를 앓고 있는 탈북민들도 사회적 지지와 교류를 통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가능함(김재엽 외 2012).

- 따라서 탈북민들이 개방적인 사회적 연결망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은 PTSD 치료 뿐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남한 사회 적응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모든 사회적 연결망과 지지가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님. 탈북민만의, 혹은 특정 이념이나 학연, 종교 등에 국한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회적 연결망의 경우 탈북민들을 오히려 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킬 수도 있음.
- 따라서 탈북민들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돕기 위한 목적의 사회적 연결망 참여 유도는 개방적이고 외향적인 교량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이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퍼트넘은 결속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교량적 사회자본을 비교하면서, 아래와 같은 차이를 지적하고 있음.
 - 결속적 사회자본은 폐쇄적이나 교량적 사회자본은 개방적
 - 결속적 사회자본은 내향적(inward looking)이나 교량적 사회자본은 외향적(outward looking)

- 결속적 사회자본 내부에서의 정보는 그 안에 머물지만 교량적 사회자본에서의 정보는 바깥으로 확산
- 결속적 사회자본의 가입자격은 특정 종교, 학연, 혈연, 인종, 성별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교량적 사회자본의 가입자격은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 있음.

● 결속적 사회자본도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에게 사회안전망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지나치게 폐쇄적인 탈북자들만의 공동체에 참여한다면,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에는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음.

■ **성추행 및 강제낙태, 인신매매 등의 경험 때문에, 특히 탈북민 여성들의 PTSD 가능성이 심각하게 높음. 또 여성들의 PTSD는 단순히 정신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추행 과정에서의 폭력피해로 신체적 부상 및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으며, 자식들과의 이별 및 가족 해체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함.**

● 따라서 특히 신체적·정신적 외상 경험을 한 탈북민 여성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사들이 면밀히 관찰하고, 자존심의 문제로 밝히기 쉽지 않은 이들의 경험이 발견되는 즉시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 **90년대 후반이후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련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었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탈북자 연구들은 (1) 이들을 통해 대표되는 북한 사회 및 정치 정보를 분석하려는 시도, 혹은 (2)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의 수혜자 혹은 대상으로 파악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음.

● 탈북민들 자신을 독립된 정치적 주체로 보고 이들의 인식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연구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

● 앞으로는 한국 사회의 일원이자 독립된 주체적 개인으로서의 탈북민을 상정하고, “우리”와 “탈북민”을 구별하여 접근하는 연구가 아니라 “우리 안의 탈북민”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려는 학문적 시도가 필요함.

참고문헌

- 강성록. 2001. “탈북자의 외상 척도 개발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 · 최지현 · 유원정. 2012. “PTSD 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사회적 교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 (4):343-67.
- 김현경. 2010. “북한이탈주민의 고문으로 인한 외상 후 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41 (3):81-106.
- 김현경 · 전우택. 2009.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이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0 (2):363-97.
- 김형국 · 이상신. 2012. “국가자긍심, 사회적 자본, 그리고 풍요인식: 한국인의 삶의 풍요인식 결정요인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62:293-320.
- 송창진. 200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기전과 치료.” 『동국의학』 10(1): 102-113.
- 서주연. 2006.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PTSD)와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유진. 2006. “새터민의 외상경험과 수치심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인진. 2009. 『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집문당.
- 이민숙. 2005. “노인의 우울과 자살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2:191-212.
- 이순형 · 조수철 · 김창대 · 진미정. 2007. 『탈북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 3.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윤경 · 김희진. 2014.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적응의 관계: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매개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45 (4):143-67.
- 조영아 · 김현아 · 김요완. 2014. “한부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적응 어려움과 대처 방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 (4):155-79.
- 진미정 · 이순형 · 김창대. 2009. 『탈북인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자본』 학지사: 서울.
- 한동호 · 도경옥 · 이우태 · 임예준. 2015. 『북한 교화소』. 서울: 통일연구원.
- 한반도평화연구원. 2008. “탈북자, 그 7년간의 삶들.” 제 12회 한반도평화포럼.
- 한샘 · 남석인 · 김윤경. 201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성역할태도가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5 (1):189-218.
- 한인영 · 이소래. 2002. “북한이탈주민의 이주형태 및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 비교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10: 121-142.

• 허성호 · 박은미 · 박준성 · 정태연. 2013. “탈북 새터민 대학생의 사회적응: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구를 이용한 사례연구.” 『스트레스연구』 21(3): 193-20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soglu, M., Paker, M., & Paker, O. 1994. “Psychological Effects of Torture: A Comparison of Tortured with Nontortured Political Activists in Turke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1: 76-81.
- Carlson, Eve B., and Rhonda Rosser-Hogan. 1991. “Trauma Experiences, Posttraumatic Stress, Dissociation, and Depression in Cambodian Refuge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 (11):1548-51.
- Cattell, Vicky. 2001. “Poor People, Poor Places, and Poor Health: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Networks and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 Medicine* 52 (10):1501-16.
- Dimond, Margaret. 1979.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Chronic Illness: The Case of Maintenance Hemodialysi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 (3):101-8.
- Gorst-Unsworth, C., & Goldenberg, E. 1998. “Psychological Sequelae of Torture and Organized Violence Suffered by Refugees in Iraq: Trauma-related Factors Compared with Social Factors in Exil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2: 90-94.
- Healy, Tom, and Sylvain Cote.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OECD.
- Helliwell, John F. 2007. “Well-Being and Social Capital: Does Suicide Pose a Puzz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81 (3):455-96.
- Mahtani, Aruna. 2003. *The Right of Refugee Clients to an Appropriate and Ethical Psychological Service.*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Schweitzer R, Melville, F., Steel, Z., & Lacherez, P. 2006. “Trauma, Post-migration Living Difficulties,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in Resettled Sudanese Refugee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0: 179-187.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사회심리적 통합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한지 20년이 넘는 현 시점에서 적응 또는 정착의 관점을 넘어 통합의 관점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확대되고 있음. 통합의 관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더 이상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담당하고 일반 국민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이상적인 상태로 바라봄. 이를 위해 일반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을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노력을 해야함.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중에서 사회심리적 차원의 통합 수준과 양상을 조사하였음. 이를 위해 사회통합의 작업 정의를 내리고 이것을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했음.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지표에 기초한 별도의 설문조사가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문헌과 선행 설문조사들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간의 상호인식과 사회적 관계를 진단했음.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통합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 소속감과 정체성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을 남한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일반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과 연계하여 타자화하려는 경향이 강함. 유대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의 접촉과 교류는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피상적인 인상과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 일반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고, 신뢰하거나 친밀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또한 일반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을 비록 차별하려는 의도는 별로 없지만,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의도도 없으며, 이들과 관계 맺기를 꺼려함.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통합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며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간의 마음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속감과 유대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의 사회심리적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파트너가 일반 국민이라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이 귀찮고 부담되는 존재가 아니라 유익하고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둘째, 언론 매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교양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광고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아울러 시민참여형 북한이탈주민 관련 방송 모니터링사업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요구와 대응이 필요함.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이 상호인식과 문화적 차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남한주민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조직생활의 원리, 대인관계의 원리 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함.

넷째,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일명 ‘브릿지 프로그램’(bridge program))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편견 해소 방안으로 잘 알려진 ‘접촉가설’의 전제조건인 상위의 공통 목표를 위해 동등한 지위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다섯째,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시대적 환경과 일반 국민의 인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착지원정책의 논리와 지원방안을 개발해야 함. 과거에 비교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냉담해지고 사회 소외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정착 단계 이후에는 일반 복지 서비스 체제에 편입하고 일반 국민과 동등한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I 서론 : 전환기의 북한이탈주민과 정부 정책

■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2016년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20년을 맞는 해임.

- 그 동안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주력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최근의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더 이상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기 어렵게 하였음.
-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부 지원이 선주민 중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여론이 커져가고 있고(윤인진, 2014; 이수정, 2014), 기초생계비 지원과 같은 정착지원제도가 오히려 복지의존성을 심화시켜 자립정착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박성재, 2012).
- 따라서 이제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사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따라 정부 정책도 변화해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이유로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안은 북한이탈주민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하기보다는 일반 국민으로 자리매김하고 기존의 복지체계에 편입하고 일반 국민과 보다 친밀하게 교류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즉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던 정착의 관점에서 통합의 관점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의 방향이 수정되어야 함. 정착의 관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수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통합의 관점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이 서로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하여 양자 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더 이상 지원의 대상만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담당해야 함. 동시에 일반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을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노력을 해야 함.
- 위에서 논의한 동향을 반영하듯 최근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정부 정책을 연구하는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의 상호인식(신미녀, 2010; 윤인진 · 채정민, 2010), 독일 통합 사례 연구(허준영, 2012; 윤철기, 2014), 접촉지대에서의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주민과의 관계(김영순, 2014; 이수정, 201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신두철, 2012)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에게만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다수집단인 일반 국민의 인식과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의 성패가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다수집단인 일반 국민에게도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연구동향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음.

■ 또 한 가지 최근의 연구동향과 정부 정책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지표 · 지수를 활용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통합의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려는 자세를 보인다는 것임.

- 예를 들어 2015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인 남북하나재단(공식명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표 · 지수 개발’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과제를 공모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함바 있음.
- 비록 재단이 수행하려 했던 과제는 개인의 정착이라는 현상에 초점을 맞춰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의 사회통합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표준화된 정착 지표 · 지수 개발을 통해 정착 실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시계열적 추이를 파악하려는 자세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됨.

- 이 논문에서는 전환기에 선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한국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작업정의를 내리고 사회통합 실태를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지수를 제안하고자 함.
- 금번 이슈보고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물질적 차원의 정착 실태에 대해서도 다루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사회통합의 정신적 측면 또는 사회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의 상호인식과 사회적 관계의 양상을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양자 간의 편견과 차별을 감소하고 공존과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함.

II 사회통합의 개념과 지표 · 지수

■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과 그 필요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큼. 이는 각 국가에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회통합의 필요성과 그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무엇이 통합이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음.

- 로빈슨(Robinson, 1998: 118)은 통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대부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혼란스런 개념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 개념이 개인화되고 논쟁적이고 맥락적인 개념이라고 덧붙였음. 카슬(Castles et al., 2001: 12)도 이민자와 난민 통합에 관한 어떤 단일의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개념, 이론, 모델이 부재하다고 지적했고, 앞으로도 이 개념이 논란의 여지가 많고 매우 논쟁적일 것으로 예측했음.
- 이 같은 개념 정의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통합은 한 사회와 그 구성원들 간의 이상적인 상태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방관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정책 과제임. 마치 평화라는 개념이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평화는 인류가 염원하는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임. 따라서 특정 사회의 상황에 적합한 개념 정의를 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중요한 역할임.

-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자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사회통합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것을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지수를 제안하고자 함. 그런 다음에 사회통합의 중요한 차원인 사회심리적 차원에 주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의 수준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1. 사회통합의 개념

■ **원론적 수준에서 통합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들이 단일한 체제에 속해서 소속감을 공유하고 상호 간의 유대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Deutsch, 1978: 198). 즉 통합은 단지 정치나 법적인 수준에서의 체계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체성, 생활방식에 대한 공통의 가치체계, 교육 등에서의 사회통합을 의미하는 것임.**

- 통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국제관계론, 사회학, 인종 · 종족관계론에서 진행되어 왔음. 윤인진(2013)은 통합에 관한 선행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통합이란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분리된 집단들이 하나의 단일한 체제에 참여하여 소속감을 공유하고 상호 간의 유대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음. 그리고 통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의 지배적인 핵심 가치들을 공유하고 그들 간에 자유롭고 친밀한 상호교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또한 사회통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배집단이 소수집단을 강압적으로 누르기보다는 소수집단이 사회의 지배적인 핵심 가치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음. 그런데 소수집단이 사회의 지배적인 핵심 가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 체제를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들도 사회에 공평하게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중요한 필요조건은 평등과 분배정의라는 점을 강조했음.
- 이민자 통합(immigrant integration)은 앞에서 정의한 통합 개념에 기초해서 ‘이민자가 거주국 사회에 참여하여 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선주민과 유대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윤인진, 2014: 282). 하지만 이민자 통합 개념 역시 국가별로, 연구자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어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통일된 개념을 찾기 어려움. 국내외의 선행 연구에서 이민자 통합에 관한 개념 정의와 지표 · 지수는 본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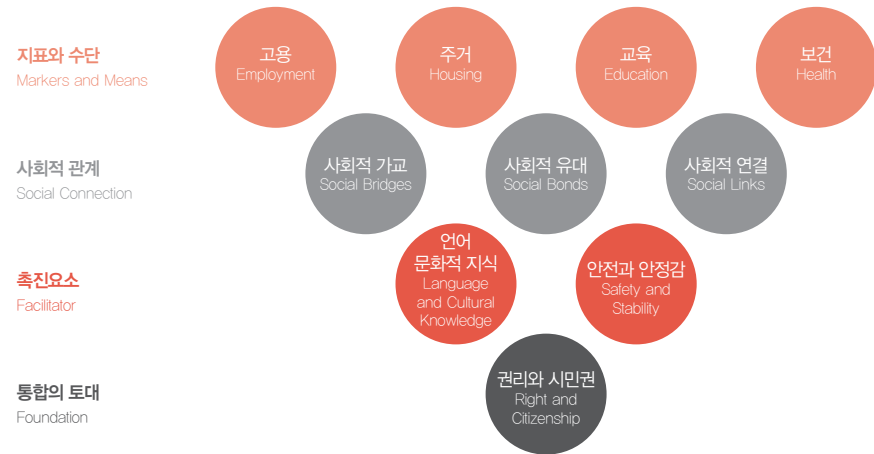
자의 이전 저서(윤인진, 2013)에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음.

■ **이민자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레첼(Krechel, 1999: 90; 고상두, 2010: 272에서 재인용)과 에이거 · 스트랭(Ager and Strang, 2008; 이성순, 2013)의 이론에 주목하고자 함.**

- 크레첼은 사회통합을 체제통합과 가치통합의 두 가지로 구분함. 체제통합은 정치 및 경제제도의 통합이며, 가치통합은 체제통합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가리킴. 크레첼은 체제통합이라는 하위체제의 통합과 가치체제의 통합이 모두 이루어져야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음.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사회통합은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통합인 체제통합과 상호이해수준, 상호교류수준, 정체성 수준으로 파악되는 가치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고상두, 2010).
- 에이거와 스트랭은 영국에서 난민의 사회통합을 연구하면서 통합의 토대, 촉진요소, 사회적 관계, 지표와 수단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안했음. 여기서 통합의 토대는 이민자의 권리와 시민권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함. 이민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핵심 기반이고, 영주권과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권리와 서비스에 따라 통합의 성공 여부가 좌우됨. 촉진요소는 언어문화적 지식과 안정과 안정감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언어문화적 지식은 이민자가 수용국의 언어구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 정착을 위한 공공 기관의 통 · 번역 지원 서비스, 이민자와 선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상호이해교육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성됨.¹⁾ 안정과 안정감은 인종차별,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되는 것과 이민자가 수용국 사회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사회적 관계는 이민자와 선주민 간에 형성되는 관계망을 의미하는 사회적 가교, 자국 출신의 이민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통한 결속을 의미하는 사회적 유대, 이민자가 정부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의미하는 사회적 연결로 구성됨. 끝으로 고용, 주거, 교육, 보건의 통합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동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1) 에이거와 스트랭은 언어문화적 지식을 통합의 촉진요소로 보는데 이민자가 수용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통합이 촉진된다는 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견해이다. 그런데 이민자가 수용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기까지는 충분한 거주기간과 그 기간에 수용국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용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은 통합의 촉진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문화적 통합의 지표일 수 있다. 마치 동화론(assimilation theory)에서 동화의 여러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를 문화접변(acculturation)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촉진요소로만 보지 않고 사회정착의 문화적 차원으로 간주한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지표 · 지수를 소개할 때 하도록 하겠다.

〈그림 1〉 에이저 · 스트랭의 이민자 통합 분석틀



출처: Ager and Strang(2008, 170); 이성순(2013: 167에서 재인용)

- 크레첼과 에이저 · 스트랭의 통합 개념에서 공통적인 것은 둘 다 통합이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통합과 가치 및 사회적 관계 차원의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임. 에이저 · 스트랭의 지표와 수단은 크레첼의 체제통합을 의미하고, 에이저 · 스트랭의 사회적 관계는 크레첼의 가치통합에 해당함.
- 에이저 · 스트랭의 이론은 국내에 많이 소개된 ‘이민자 통합정책 지수’(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 MIPEX)와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첫째, MIPEX는 이민자가 수용국 사회에 통합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존재하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반면 에이저 · 스트랭은 실제 이민자가 수용국 사회에서 통합된 수준을 측정함.
 - 둘째, MIPEX가 통합의 제도적 차원에만 초점을 두고 사회심리적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한 반면 에이저 · 스트랭은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음.
 - 셋째, MIPEX는 노동시장 접근, 가족 상봉, 장기거주, 정치 참여, 국적 접근, 차별시정과 같은 7개의 영역에서의 통합 수준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이후에 7개 영역에서의 점수를 총합하는 방식으로 각국에서의 이민자 통합 수준을 측정함.
 - 반면 에이저 · 스트랭은 이민자 권리와 시민권을 통합의 토대로 보고 MIPEX의 차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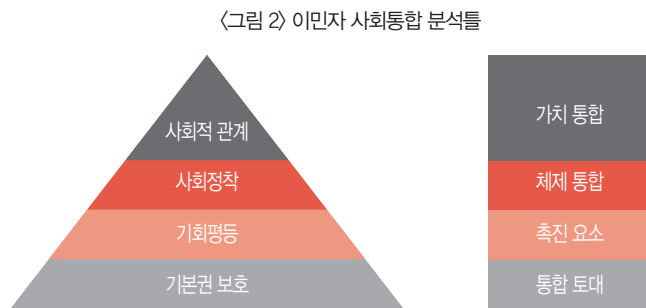
정 영역처럼 통합의 한 가지 차원으로 다루지 않음. 또한 에이저 · 스트랭은 이민자가 수용국에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합의 촉진요소로 보고 있는데 MIPEX에서는 이것이 차별시정 영역에 속함. 정영태 외(2014)가 지적했듯이 사회통합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사회통합의 상태 또는 목표와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사회통합 지표로 삼는 점은 문제일 수 있음. 그런 점에서 에이저 · 스트랭의 이론에서 통합 토대와 촉진요소는 사회통합 영향요인이 되고 지표 · 수단과 사회적 관계는 사회통합 상태가 되어서 정영태 외가 지적하는 통합의 목표와 평가기준을 혼동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음.²⁾

- 위에서 논의한 선행 이론들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본 연구자는 이민자 통합을 ‘이민자가 거주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소속감을 갖고 선주민과 유대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함. 여기서 크레첼의 체제통합과 에이저 · 스트랭의 지표 ·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고, 크레첼의 가치통합과 에이저 · 스트랭의 사회적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수용국에 대한 소속감과 선주민과의 유대관계임. 그리고 정영태 외의 문제제기와 에이저 · 스트랭 이론을 참고하여 사회통합의 상태와 목표를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과 구분함.
- 따라서 이민자가 수용국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생활권을 보장받고 선주민과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통합의 촉진요소 또는 영향요인으로 간주함. 그리고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적응해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체제통합)과 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선주민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가치통합 또는 사회적 관계)을 사회통합의 상태로 정의함.
- 위와 같은 사회통합의 구성요소와 각 요소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2〉와 같음.

2) 정영태 외(2014: 67-68)는 사회통합을 ‘사회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다른 구성원과 국가기관을 신뢰하며 국가나 지역사회 또는 다른 구성원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사회통합의 지표로 신뢰, 소속감, 협력의사(행동)를 설정했다. 이민자의 속성, 선주민의 수용 전략, 정부 정책, 국내의 환경 등은 사회통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것들을 사회통합 지표와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개서, 38-39). 사회통합 지표와 사회통합 영향요인을 구분하지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사회통합의 지표에 소속감, 신뢰, 협력의사(행동)와 같이 사회심리적 요소만을 포함한 것은 종합적인 지표로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사회통합에 관한 많은 국제적인 지표들은 심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취업, 국적, 거주, 건강, 교육과 같은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Council of Europe, 1997; OECD, 2015).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의 이민자 통합 지표로 제시한 OECD는 이민자 통합의 영역으로 노동시장 성과(labor market outcomes), 직업의 질(job quality), 성인의 인지 기술과 훈련(adult's cognitive skills and training), 가구 소득(household incomes), 주거(housing), 건강(health status and health care),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으로 구분했다. 또한 상식적으로 이민자가 수용국에서 취업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활동은 사회통합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질적이고 제도적 차원의 통합을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적 차원의 통합만을 논의한다는 것은 사회통합의 지표로서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이민자가 수용국에서 통합되는 과정은 기본권 보호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개인의 생명과 권리의 보호에서부터 시작하여 기회평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사회, 문화, 경제적 영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소속감과 유대관계와 같은 정신적인 의식과 상호작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정함.

- 이런 단계 모형은 인본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hierarchy of needs)에 근거하고 있음. 매슬로우는 인간은 생리 욕구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충족되면 그것보다 상위 단계인 안전 욕구, 애정·소속 욕구, 존경 욕구, 자기 실현 욕구를 추구한다고 보았음. 그리고 하위 수준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 수준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음(Maslow, 1943). 같은 맥락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에서도 물질적인 수준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정신적인 수준에서 소속감과 유대관계를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봄.



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의 지표

■ 북한이탈주민은 이민자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민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민자 통합지수를 사용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적합한 사회통합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크레첼과 에이거·스트랭의 사회통합 모델과 MIPEX 모델을 참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과 측정 지표를 제안했음.

- 〈표 1〉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세부 영역과 구체적인 측정 지표를 예시로 제시했음.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면 전문가들과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현실적인 지표·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표 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지표 영역 및 측정 문항

통합 요소	주요 영역	세부 영역	측정 지표
통합 토대	1. 기본권 보호	1.1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	• 감시, 구금, 폭행, 신체적 구속 여부 •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접근 여부
		1.2 인격적 대우	• 모욕, 무시, 언어 폭력 여부
		1.3 교육권	• 의무교육 접근 여부
		1.4 건강권	•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 여부
		1.5 가족 재결합	• 북한 또는 제3국 잔류 가족과의 연락, 교류 및 재결합 여부
촉진 요소	2. 기회 평등	2.1 직장	• 취업, 승진, 봉급에서의 차별 여부
		2.2 주거	• 주택 구입 및 임대 시 차별 여부
		2.3 공공시설 이용	• 상업시설, 공공기관, 교통수단 등의 이용 관련 차별 여부
		2.4 정치 참여	• 참정권 여부, 투표 참여, 정당 가입, 선거 출마, 정치적 활동을 위한 기부/기금활동, 집회 및 시위 참가
		2.5 병역	• 병역 의무 및 권리
체제 통합	3. 사회 정착	3.1 경제 활동(취업, 실업, 고용 안정성, 근로 시간, 직업, 종사상의 지위 등)	• 취업 여부, 고용 안정성(정규직 및 비정규직 종사), 근로 시간, 직업 및 산업 종류, 종사상의 지위 • 선주민과의 경제활동 차이 여부
		3.2 소득 수준(소득, 재산, 빈곤, 생계보조금 수령 등)	• 개인 소득, 가족 소득, 재산, 빈곤 여부, 생계보조금 수령 여부, • 주관적 계층의식 • 선주민과의 소득 수준 차이 여부
		3.3 교육(교육 수준 등)	• 한국에서의 교육 여부, 최종 학력 • 선주민과의 교육 격차 여부 • 탈북 청소년의 선주민 학생과의 학업성취도, 대학 진학을 격차
		3.4 문화(한국어 능력, 한국 법, 제도, 관습 습득 등, 가치 수용, 매스미디어 접촉)	• 한국어 구사 능력, 외래어 및 한자 이해 능력, 역량 • 한국 법, 제도, 관습 이해 정도 • 한국의 핵심 가치(민주적 가치 등) 수용 정도 • 매스미디어 접촉 정도, 유형
		3.5 건강(신체 건강, 정신 건강 등)	• 주관적 신체 건강 수준, 정신 건강 수준 • 질병 여부 및 종류 •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활동 어려움 • 선주민과의 건강 수준 차이
		3.6 주거(주거 환경의 수준)	• 선주민과의 주거 격차 또는 통합 수준 • 주택의 유형과 수준 • 주거지의 사회경제적 수준
가치 통합	4. 사회적 관계	4.1 정체성	• 한국 국민, 북한 출신, 한민족 정체성
		4.2 소속감	• 지역 주민, 한국사회 구성원, 한국 국민, 아시아인, 세계시민으로 느끼는 소속감 • 외국으로 이민 갈 의향
		4.3 사회적 거리감	• 주민, 직장 동료, 친구, 배우자 관계에서의 사회적 거리감 • 이미지
		4.4 신뢰	• 동등하고 역량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 정도
		4.5 사회적 가교	• 북한이탈주민과 원주민 간에 형성된 관계망
		4.6 사회적 유대	•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형성, 자조모임, 자발적 결사체 참여
		4.7 사회적 연결	• 북한이탈주민을 국가제도(정부의 정착지원서비스)에 연결해주는 체제

■ 지금 제시한 사회통합 지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경험적인 조사가 수반되어야 함. 본 연구에서는 향후 연구 과제로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들(연구자, 정책집행자, 시민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행해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할 계획임.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행하여 본인들이 평가하는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고 전문가들의 평가와 비교하고자 함. 이에 앞서 다음 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통합에 관련해서 보고한 내용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Ⅲ 선행연구 검토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 북한이탈주민에 일반 국민의 인식에 관련해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음.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는 2007년 이후 매년 '통일의식조사'의 일부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조사해 왔음. 이 조사연구는 전국단위 1,200명을 대상으로 면대면으로 진행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음.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이들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태도,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견해,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태도와 차이를 포함하고 있음.

● 이 조사연구의 특성과 장점은 시계열적으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임. 예를 들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친근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2007년 63.8%에서 2011년 58.9%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에 ‘친근하게 느낀다’는 비율은 2007년 36%에서 2011년 40.9%로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음. 2013년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42%였으며,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58%(별로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 49.7%,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8.3%)로 역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물론 연령대, 직업별, 거주지역별 응답 차별성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소폭이나마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아직도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친근하지 않다'고 반응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냉정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 또한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유형별 태도를 살펴보면, 일단 '동네이웃, 직장동료'로서는 괜찮지만,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2013년 조사결과도 2012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유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정책,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역할, 정부의 지원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인식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권 의식 실태조사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11: 131)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일반 국민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45.5%가 찬성하는 반면, 전문가 집단은 76%가 찬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서 일반 국민의 약 절반만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임.
- 한편 2012년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 전화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나와 동네 이웃으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4.3%가 찬성했고, '친구로 지내는 것'에는 82.8%가 찬성했음. '나의 직장 동료로 지내는 것'에는 79.8%가 '나의 직장 상사가 되는 것'에는 73.6%가 좋다고 답했음. 그러나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에는 조사대상자의 53.1%만 찬성한다고 답했음. 또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는 51.0%,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는 49.3%만이 각각 찬성 의견을 보여 주었음.
- 제한적인 조사이긴 하지만, 2012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인 서울남부하나센터 주민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 두 명 중 한명은 북한이탈주민을 같은 민족·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 10명 중 4명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2010 한국의 사회동향'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에 관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음.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병로 박사는 일반 국민의 대다수는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 경쟁이 심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노동시장에서 북한이탈주민

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일반 국민과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7.8%에 달하고 똑같이 경쟁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2.2%라고 보고했음. 김병로는 이런 조사결과를 일반 국민은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경쟁자로 보지는 않지만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해 직장동료가 되었을 때에는 동일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음(조현숙, 2010).

- 2000년 4월 여론조사기관인 이트렌드연구소(2000)에서 만 13세 이상의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접촉경험을 갖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조사 응답자 중 36명(7.2%)만이 만나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정서는 대부분 직접적인 접촉경험보다는 언론을 통한 간접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귀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49%는 '동포애를 느낀다'고 대답한 반면 12.8%는 '이방인같이 느껴진다' 3.4%는 '적대감이 느껴진다'라고 대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호적인 정서를 갖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게 나타났음. 그러나 34.2%는 '별 감정없다'고 대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연령별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를 비교하면 10~20대가 가장 관심이 없고 40대와 50대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을 동포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음.

■ 많은 조사연구는 일반 국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심진섭, 1995; 이수정, 1999; 전우영, 1999; 김혜숙, 2000; 전우영·조은경, 2000). 통일연구원(2002)의 연구에서도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일정한 사회적 거리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장호(1992)가 제기한 6.25와 적색공포증, 오수성(1993)과 조혜정(1996)이 제기한 바대로 남한과 북한의 장기간 분단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북한에 대한 레드콤플렉스가 해소되고 남북 간에 문화·경제적 교류가 많아졌음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나 호의적인 태도는 크게 좋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김혜숙, 2002; 정연중, 2003). 이러한 경향은 북한 또는 북한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이미지나 고정관념이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연장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시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남한주민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북한이탈주민에게 투영되어 북한주

민, 혹은 북한체제와 북한이탈주민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바라보고 개성과 개별성을 갖춘 개인으로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 것임.

- (사)새조위가 2009년 남한주민 500명과 북한이탈주민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편견을 갖는 주된 이유는 ‘북한정권에 대한 혐오감’이고, 그 다음으로 ‘남한사회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아서’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로 나타나고 있음. 남한주민은 북한정권이 싫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단지 자신들이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편견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호 인식에서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신미녀, 2009).
- 한국여성개발원의 2006년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보고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의 편견과 부당한 대우 때문에 직장 내에서 구조적, 문화적, 일상적 차별에 직면한다고 보는 반면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대해서 갖는 잘못된 편견이 오해와 갈등을 낳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2010년 『북한이탈주민 관련 상호인식 및 사회·문화적 적응수준 변화』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가진 서로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긍정적 인식과 이미지를 가지기 위한 상호이해 교육 프로그램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한편 2009년 이금순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주민 78.4%가 “용의가 없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에게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애를 느낀다’는 한국국민의 응답은 23.2%에 불과하였음.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한국국민에 대해 48.0%가 동포애를 느낀다고 답변하고 있어 대조를 이룸.
-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개인태도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김영수(1998), 정기선(1999), 전우택 외(2000), 홍순혜 외(2003), 양계민·정진경(2005) 등이 있음. 이들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나 태도 등은 이들과의 접촉 경험 유무뿐만 아니라 접촉한 경우에도 관계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연민의 정서와 함께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는 것(김영

수, 1998; 정기선, 1999; 양계민·정진경, 2005)으로 나타났음.

- 한편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이나 보호담당형사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전우택 외, 2000; 홍순혜 외, 2003; 양계민·정진경, 2005)를 갖는 것으로, 대안학교교사는 긍정적 정서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음(양계민·정진경, 2005).
- 남한사람들이 본 ‘새터민’의 특성은 규칙보다 공권력 중시, 자존심과 물밑교섭, 다혈질적 성격(조정아 외, 2006: 139-143)인 반면에 새터민이 느끼는 남한사람들의 자신들에 대한 이미지는 ‘배신자’, ‘거지’, ‘범죄자’로 범주화되며 특히 성역할에서 북한여성들의 보수성이 지적되고 있음(정진경, 2002). 북한이탈주민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한 남한주민들은 역시 또 다른 ‘이중성’을 지적한다. 그들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한편으로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데, 다른 한편으로 수평적이며 평등주의적이다”(이순형 외, 2011)라는 것임.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

■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광범위한 차별과 멸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국가인권위원회, 2005: 22).**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2012년 당시 전국 거주자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한(11,166명 설문분석 포함) 결과인 『201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한상황에 불만족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57.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 때문에’ 45.6%, ‘나의 능력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격차가 심해서’ 31.0%(복수응답)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인식하는 한국사회의 차별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이들의 사회적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정례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보고서,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전신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2001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한사람의 편견과 차별’이 사회(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구체적으로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남한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218명으로 전체 응답자 973명의 22.4%를 차지하였음. 이는 한국

사회에서 남한주민들과 융화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임.

- 2003년 통일연구원 조사에서는 남한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을 갖는 이유로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음. 단지 출신지역이 북한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편견의 대상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사고방식이 달라서’, ‘노력 없이 기대수준이 높아서’, ‘말투가 달라서’가 중요한 이유로 보고되었음. ‘능력이 부족해서 편견을 갖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소수의 북한이탈주민들만이 동의했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인권침해의 관점에서 조사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 2012)의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출신에 따른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국민인식개선과 관련 홍보를 강화해야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
- 2009년의 여성가족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불안과 국내 정착 후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인해 조직사회에 융화하지 못하면서 학교 폭력 등의 피해자로 전락되고 있으며, 이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지역민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사회적응 문제이며, 그들이 토로하는 가장 큰 불만은 지역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상에서의 차별과 배제 경로도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남. 우선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 사회에 짐이 되는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아픈 데가 많은 사람들로서 언제나 사회적 짐으로 인식되는 어쩔 수 없는 소수자로서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
 - 또한 마음은 항상 북에 두고 온 이산가족에 가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 어려운 삶을 체험함. 또한 새로운 사회에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가부장적 성역할의 지속 등으로 남한사회 ‘2등 국민’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조영아(2011)는 이러한 일상에서의 차별 경험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음. 이를 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을 매개 변인으로 가정하여 초기 정착 북한이탈주민 500명에게 차별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 및 불안 척도를 실시한 결과, 차별감을 많이 지각할수록 불안이나 우울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차별 경험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다는 것임.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차별감에 대한 인식은 남북한 주민 간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함. 대체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의 편견과 부당한 대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보는 반면 남한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데 남한 사회에 대해 갖는 잘못된 편견이 오해와 갈등을 낳는다고 생각함. 이러한 두 집단의 대립적 시각은 북한이탈주민의 양가감정을 증폭시키고,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두 집단 간의 시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입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하는 혹은 인식하는 차별이나 편견은 시간이 지나도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함.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과 조국을 버리고 온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이들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언제든지 배신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편견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들과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직장을 구하는데 방해요소가 됨(진미정 · 이순형, 2006).
- 윤인진(2007)은 문화적응 실태에 관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주민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언어나 가치관, 사고방식 또는 사회제도 등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음. 문화생활 중 여가활동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시청과 같은 대중매체 이용을 가장 많이 하고 취미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학습활동 등 적극적이고 자기개발적인 여가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음. 사회관계에서 한국사회에 연고가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보와 기회에 연결될 수 있는 사회연결망 부재의 문제를 안고 있고, 교회를 제외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과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모임과 단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했음. 이들은 남한주민과 일차적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결국은 동료 북한이탈주민들끼리 어울리게 되면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고 밝혔음.
 - 심리적응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간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 남한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태도 등으로 인해 심리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했음. 남한사람의 편견과 차별은 사회 및 직장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였음.
 - 건강 측면에서 상당수 북한이탈주민의 기본적 건강 상태는 저하되어 있고, 만성질환이

환율과 질병수가 남한주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어서 취업은 물론 정상적인 사회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음.

■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를 사회심리적 통합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간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 일반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태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노력하지만 일반 국민은 여전히 이들을 북한과 연계해서 타자화하려는 경향을 보임.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지 않음.
-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일반 국민과 친밀한 일차적 관계를 맺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동료 북한이탈주민들끼리 어울리게 됨. 주류 사회와의 취약한 연결망은 취업 정보 등 기회 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축시켜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하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됨.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통합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참여했던 여러 설문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해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의 상호인식과 사회적 관계의 양상을 진단하도록 하겠음.

IV 분석 자료

■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여러 설문조사에서 수집되었음.

- 첫 번째 자료는 2010년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성인 남녀 1,200명의 북한이탈주민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하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로 표기)부터 수집되었음. 이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수준과 적응 의식, 그리고 자신과 남한주민에 대한 상호인식, 생활만족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두 번째 자료는 2010년에 동아시아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성인 남녀 1,019명의 일반 국민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설문조사(이하 '2010년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조사'로 표기)에서 수집되었음. 이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 북한이탈주민 정체성 인식,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세 번째 자료는 2010년에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와 사회학과 BK21갈등사회교육연구단이 성인 남녀 1,207명의 일반 국민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하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로 표기)에서 수집되었음. 이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평

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네 번째 자료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14년에 성인 남녀 1,011명의 일반 국민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로 표기)에서 수집되었음. 이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다섯 번째 자료는 2015년에 동아시아연구원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성인 남녀 1,006명의 일반 국민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하 '2015년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로 표기)에서 수집되었음. 이 조사에서는 2010년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문항들을 동일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2010~2015년 간의 일반 국민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개의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들을 비교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의 상호인식과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통합의 수준과 실태를 확인하고자 함.

V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통합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중에서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통합 수준과 실태를 검토함 앞에서 제시했듯이 사회심리적 통합은 소속감과 유대관계의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여기서 소속감은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가와 관련된 것이고 유대관계는 일반 국민과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함.

1. 소속감

-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을 '북한사람', '남한사람', '북한출신 남한사람', '동포'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규정하는지를 조사하였음.
- 그 결과, 북한출신 남한사람으로 보는 사람(50.6%)이 제일 많았고, 남한사람(24.9%), 북한사람(15.3%), 동포(9.2%)의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 일반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2010년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19명의 일반 국민 응답자들 중에서 43.9%는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출신 남한사람으로, 42.9%는 북한사람으로, 11.2%는 남한사람으로, 1.2%는 동포로 인식하고 있음.
- 2014년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사람(48.2%)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북한출신 남한사람(33.3%)으로 인식함. 남한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3.7%에 불과함.
- 2015년의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3%는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출신 남한사람으로 인식하고, 23%는 북한사람, 18.8%는 재외동포, 15%는 남한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과 2015년의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 결과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일반 국민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약해진 반면 남한 사람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해진 것임. 하지만 남한사람보다는 북한 출신 남한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들을 북한과 연계해서 보는 시각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단위: %)

보기	2010년	2014년	2015년
북한사람	43	48	23
남한사람	11	14	15
북한출신 남한사람	44	34	43
재외동포	1.2	3	18.8(한민족)
기타	0.8	1.9	0.1
응답자 수	1,019	1,011	1,006

자료: 동아시아연구원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2010, 201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과 차별실태조사 자료(윤인진 외, 2014)

주 1: 설문 문항은 "귀하께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제일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주 2: 2010년, 2014년 조사에서 '재외동포'로 있었던 4번 항목이 2015년 조사에서 '한민족'이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변경되었고,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사람'으로 인식하였던 조사대상자가 '한민족'을 더 적합한 범주로 채택한 것으로 보임.

■ 일반 국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을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남북통일과 민족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임(윤인진, 2009).

-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민이고 이들이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무조건 남한문화에 동화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봄.
- 반면 다문화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외국계 이주민과 동일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함.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는 아직 논쟁의 소지가 많고 보다 진지한 숙의가 필요한 의제라고 생각함.
- 이런 논쟁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과 2015년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외국계 이주민과 혈통이 다르기 별개의 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북한이탈주민과 외국계 이주민은 모두 이주민이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같이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음.
-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국민으로 귀화한 이주민을 별개의 집단으로 봐야 한다는 비율은 2015년 조사에서 27.3%인 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9.2%로 혈통적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을 한국인으로 귀화한 이주민과 다르게 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약간 우세함.
- 2010년에 비교해서 2015년에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비율은 감소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통일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7.7%인 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4.2%로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정도가 다소 높은 편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에 대한 부담감과 다른 소외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착지원이 한국 사회의 다른 소외계층과 비교해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찬성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비율이 2010년에는 각각 30.9%와 20.8%였으나 2015년에는 31.6%와 21.8%로 약간 증가했음. 특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많음.

〈표 3〉 북한이탈주민을 이주민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태도 변화(2010-2015)

보기	조사 년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부정 퍼센트 차이	모름/무응답
탈북자와 한국인으로 귀화한 이주민은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	2010	4	35.7	31.7	25.5	2.7	11.5	0.5
	2015	2.2	25.3	33.4	31.8	7.4	-11.7	0
탈북자는 남북통일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2015	4.2	33.5	38	21.3	2.9	13.5	0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정착지원이 우리나라의 다른 소외계층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많다	2010	3.5	27.4	46.5	18.6	2.2	10.1	1.7
	2015	4.9	26.7	46.6	19.8	2	9.8	0

자료: 동아시아연구원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2010, 2015)

■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일반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북한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이들의 정착지원에 대해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고, 이들을 한민족의 일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1) 문화변용과 정체성

■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이민자들은 모국을 떠나 새로운 거주국에서 살아갈 때 ‘문화변용’(acculturation)을 경험함.

- 베리(Berry, 1987)는 소수민족집단 이민자들의 문화변용이 “다른 인종과 민족집단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와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이나 관습의 유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통합, 동화, 고립, 주변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하였음.
- 2010년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문화변용과 정체성의 수준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문화와 북한주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 8개, 남한의 문화와 남한주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 8개를 사용하였음. (〈표 4〉 참조)

-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문화 및 정체성 수용 수준은 평균 4.19점(표준편차 .53점)이었고, 모든 문항에서 척도의 중간치인 3.0점을 넘어서(최저 3.65점~최고 4.36점) 이들이 남한문화를 받아들이고, 남한주민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남한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는 자세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나는 진정한 남한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진술에 대해 응답자의 2.7%만이 동의하지 않고 87%는 동의할 정도로 남한사람이 되고 인정받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이들이 북한문화와 북한주민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에는 보통 이하(평균 2.64점, 표준편차 .68점)로 응답하고 있어 북한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나는 자식들이(여기서 같이 산다면) 북한의 풍습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겠다’는 진술에 대해 23%가 동의한 반면 58%는 동의하지 않았음. 특히 북한출신자끼리 북한식 말투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며, 북한의 지식과 문화를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인식해서 가능하면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하지만 ‘지금 남한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정신적 뿌리는 북한이라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한 사람들이 39%,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39%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런 결과는 비록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 싫어서 탈출했고 북한에 비교해서 남한의 문물과 생활양식을 높게 평가하지만 자신이 북한출신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 그리고 북한문화/정체성에 대한 태도와 남한문화/정체성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해보았더니 상관관계 계수가 $r=-.08$ 로서 크기도 작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음. 이런 결과는 양쪽의 문화/정체성 간에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고 해서 다른 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4〉 북한과 남한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태도(단위: %, 점)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차이	평균 점수
1. 지금 남한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정신적 뿌리는 북한이라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다	21.1	17.9	22.1	26.3	12.6	-0.2	2.91
2. 나는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30.4	26.9	21.6	16.2	4.8	-36.3	2.38
3. 나는 진정한 남한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0.9	1.8	10.1	40.4	46.7	84.4	4.30
4. 나는 자식들이(여기서 같이 산다면) 북한의 풍습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겠다	30.7	26.8	19.7	15.5	7.4	-34.6	2.42
5. 나는 북한 출신자들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 하겠다	24.6	25.4	27.5	17.1	5.3	-27.6	2.53
6. 나는 남한에서 경험한 새로운 생활이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다고(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1	3.5	21.2	47.0	27.3	69.6	3.96
7. 북한에 남아 있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11.1	16.7	31.1	29.3	11.9	13.5	3.14
8. 나는 북한에서의 삶을 자주 떠올리며 그리워한다	18.8	21.0	25.7	26.4	8.2	-5.2	2.84
9. 나는 북한 출신자끼리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식 말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36.9	35.1	17.0	8.6	2.4	-60.9	2.05
10. 나는 남한사회에서 고유하게 발전된 생활양식을 받아들일 것이다	0.5	1.3	13.2	45.8	39.3	83.3	4.22
11. 나는 일상생활에서 남한식 말투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겠다	1.4	2.9	9.5	38.8	47.4	81.8	4.28
12. 북한 출신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15.2	21.3	35.5	21.7	6.3	-8.6	2.82
13. 나는 자녀들이(여기에서 같이 살거나 산다면) 남한 사회의 문물을 잘 받아들이도록 해 주겠다	1.3	1.0	9.2	37.7	50.8	86.3	4.36
14. 나는 남한 사회에 대한 지식들을 즐거운 기분으로 배우려고 한다	0.4	0.8	9.3	41.3	48.2	88.2	4.36
15. 나는 새롭게 사귀 남한 사람들과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겠다	0.9	1.9	9.5	41.9	45.8	84.8	4.30
16. 나는 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우에도 어색하거나 낯선 느낌이 들지 않는다	6.9	10.6	20.3	34.5	27.7	44.7	3.65

주 1) 차이는 긍정적 응답의 합(‘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에서 부정적 응답의 합(‘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을 뺀 값으로 그 값이 클수록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한다.

주 2) 위의 문항 1, 2, 4, 5, 7, 8, 9, 12는 북한문화와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고, 문항 3, 6, 10, 11, 13, 14, 15, 16은 남한문화와 정체성과 관련된 것임.

■ 베리의 문화변용 모델을 사용해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문화/정체성 유지 수준과 남한문화/정체성 수용 수준을 조합하여 통합형, 동화형, 고립형, 주변화형으로 유형화하였음. 여기서 북한문화/정체성과 남한문화/정체성 수준의 중간점으로 응답 범주의 ‘보통’에 해당했던 점수 3점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작으면 ‘약함’으로, 그것보다 크면 ‘강함’으로 구분하였음.

○ 〈표 5〉에서 보듯이 통합형은 북한문화/정체성과 남한문화/정체성 수준이 둘 다 강한 경우이고, 동화형은 북한문화/정체성은 약한데 남한문화/정체성은 강한 경우임. 고립형은 북한문화/정체성은 강한데 남한문화/정체성은 약한 경우이고, 주변화형은 북한문화/정체성과 남한문화/정체성이 둘 다 약한 경우임.

○ 이와 같은 유형에 따라 응답자들을 분류한 결과 동화형이 전체 응답자의 6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통합형(33.3%), 주변화형(0.9%), 고립형(0.2%)로 나타났음. 이런 결과는 앞서 〈표 5〉에서 북한과 남한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16개의 문항들을 개별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문화를 수용하고 남한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함.

〈표 5〉 북한이탈주민의 문화변용과 정체성 유형(단위: 명, %)

	북한문화정체성		
	강함	약함	
남한문화	강함	통합형 379(33.3)	동화형 746(65.6)
정체성	약함	고립형 2(2)	주변화형 10(9)

2) 상호 인식

■ 2010년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신과 남한주민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독일 알렌스바흐 여론조사연구소가 사용했던 이미지에 대한 형용사들 외에도 추가로 채정민(2003)이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개발한 형용사들을 사용하여 총 21개의 형용사들을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과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았음.

○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주된 긍정적 평가로는 ‘친절하다’와 ‘적극적이다’의 경우 3.8점(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임), '단정하다', '근면하다', '개방적이다'의 경우 3.7점 등이었음.

- 하지만 '경쟁적이다'의 경우에 4점을 주어서 남한주민이 상당히 경쟁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그리고 '진실하다'(3점), '믿을만하지 않다'(2.9점), '피상적이다'(3.1점), '권위적이다'(3.1점) 등의 인식에 대해서도 보통 정도로 평가해서 특별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친절성, 근면성, 합리성, 적극성 등과 같은 측면에서는 남한주민을 좋게 평가를 하지만 진실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런 조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을 처음 대할 때는 친절하고 도움을 줄 것 같은 인상을 받다가도 막상 도움을 청하면 언제 그랬냐 하듯이 모른 척 하거나 또는 남한에서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충고하는 것을 들으면서 남한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구나 하고 느끼는 것과 같은 맥락임.
- 남한주민 이미지에 관한 형용사들을 사용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남한주민에 비교해서 다소 떨어지는 중간 정도의 평가를 했음.
- 자신들의 특징적 이미지로 강하게 동의하는 것은 '거칠다'(3.6점), '깔끔하다'(3.6점), '단정하다'(3.5점), '자기에게 관심을 둔다'(3.4점), '지적이다'(3.4점), '경쟁적이다'(3.4점), '적극적이다'(3.4점) 등이다. 반면 자신들의 이미지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락해 보인다'(2.5점), '관료적이다'(2.6점), '개방적이다'(2.8점), '유쾌해 보인다'(2.8점) 등임.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표 6>에서 각 이미지에 주어진 평균 점수의 차이를 비교했음. 그 결과 대부분의 문항들에서 남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예를 들면, '친절하다'와 '개방적이다'의 경우 남한주민에게 각각 3.8점과 3.7점을 주었다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각각 2.9점과 2.8점을 주어서 평균 1점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음. 특히 '거칠다'라는 문항에서는 남한주민에게 2.4점을 준 반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3.6점을 주어 평균 점수 차이가 1.2로 벌어졌음.
- 반면 진실성과 신뢰성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주민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이런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통상적으로 자신들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비록 세련되지 못하고 직설적인 면은 있지만 의리가 있고 진실하다는 것과 일치함.

<표 6>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이미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비교(단위: %, 점)

문항	남한주민 이미지		북한이탈주민 이미지		두 집단 이미지 비교 평균점수 차이(A-B)
	차이	평균 점수(A)	차이	평균점수(B)	
1. 자기에 관심을 많이 둔다	56.4	3.7	35.6	3.4	0.3
2. 단정하다	55.2	3.7	41.5	3.5	0.2
3. 친절하다	66.8	3.8	-8.1	2.9	0.9
4. 근면하다	58.3	3.7	8.3	3.1	0.6
5. 지적이다	49.7	3.6	33.8	3.4	0.2
6. 개방적이다	53.0	3.7	-15.8	2.8	0.9
7. 유쾌해 보인다	49.3	3.6	-18.6	2.8	0.8
8. 자비심이 많다	36.3	3.4	1.5	3.0	0.4
9. 진실하다	-0.9	3.0	17.4	3.2	-0.2
10. 안락해 보인다	16.4	3.2	-42.5	2.5	0.7
11. 돈에 인색하다	41.6	3.5	3.2	3.0	0.5
12. 관료적이다	-27.6	2.7	-28.5	2.6	0.1
13. 믿을만하지 않다	-6.7	2.9	1.4	3.0	-0.1
14. 피상적이다	6.5	3.1	-4.7	2.9	0.2
15. 불만족해 보인다	-18.4	2.8	21.2	3.2	-0.4
16. 깔끔하다	47.7	3.6	44.5	3.6	0
17. 합리적이다	45.1	3.5	9.3	3.1	0.4
18. 권위적이다	6.6	3.1	-1.8	3.0	0.1
19. 경쟁적이다	70.7	4.0	35.2	3.4	0.6
20. 적극적이다	64.8	3.8	33.9	3.4	0.4
21. 거칠다	-47.3	2.4	45.7	3.6	-1.2

- 이번에는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갖는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이미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던 것들은 '근면하다'와 '지적이다'에 그쳤고 나머지 긍정적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음. 특히 '개방적이다', '유쾌해 보인다', '자비심이 많다', '안락해 보인다', '친절하다', '진실하다', '합리적이다'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았음.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부정적 이미지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들은 '돈에 인색하다', '불만족해 보인다', '권위적이다' 등임.

● 전체적으로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이들이 편안하고 친근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음.

〈표 7〉 북한이탈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2010년)

문항	①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차이	평균 점수
1. 자기에 관심을 많이 둔다	1.2	21.1	52.8	22.4	2.5	2.6	3.04
2. 단정하다	1.7	22.2	53.4	21.0	1.7	-1.2	2.99
3. 친절하다	2.2	29.0	48.7	19.2	0.8	-11.2	2.87
4. 근면하다	1.8	16.4	38.9	40.5	2.4	24.7	3.26
5. 자적이다	1.8	22.9	57.0	17.3	1.0	-6.4	2.93
6. 개방적이다	8.4	49.3	32.6	8.9	0.9	-47.9	2.45
7. 유쾌해 보인다	9.2	47.9	33.4	9.0	0.5	-47.6	2.44
8. 자비심이 많다	6.6	42.1	42.9	8.9	0.5	-39.3	2.56
9. 진실하다	3.7	29.5	51.6	14.1	1.1	-18.0	2.79
10. 안락해 보인다	9.2	45.8	38.3	6.4	0.4	-48.2	2.43
11. 돈에 인색하다	1.7	15.4	42.9	32.9	7.1	22.9	3.28
12. 관료적이다	3.1	27.1	54.4	13.6	1.7	-14.9	2.84
13. 믿음만하지 않다	2.2	22.7	53.0	18.7	3.0	-3.2	2.98
14. 피상적이다	2.6	22.7	55.8	16.6	2.2	-6.5	2.93
15. 불만족해 보인다	2.2	19.7	45.1	29.1	3.4	10.6	3.12
16. 깔끔하다	1.9	23.7	58.3	14.9	1.2	-9.5	2.90
17. 합리적이다	1.8	23.4	62.9	11.2	0.6	-13.4	2.85
18. 권위적이다	3.6	32.5	49.2	13.6	1.1	-21.4	2.76
19. 경쟁적이다	2.0	25.0	47.8	22.8	2.3	-1.9	2.98
20. 적극적이다	1.7	20.8	53.7	21.3	2.5	1.3	3.02
21. 거칠다	1.3	21.6	53.6	18.8	4.8	0.7	3.04

자료: 2010년 한국인의 갈등인식조사

■ 2014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동일한 문항들을 사용해서 일반 국민이 북한이탈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이미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근

면하다’, ‘순박하다’, ‘인간미가 있다’이고 나머지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오히려 높았음.

● 예를 들어, ‘개방적이다’, ‘유쾌해 보인다’, ‘자비심이 많다’, ‘안락(편안)해 보인다’, ‘합리적이다’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보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욱 높았음. 반면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믿음만하지 않다’, ‘권위적이다’, ‘피상적이다’임.

〈표 8〉 북한이탈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2014년)

문항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차이	평균(5점척도)
1. 자의식적이다(자기에 관심을 많이 둔다)	28.2	50.0	21.8	6.4	2.9
2. (외모가) 단정하다	22.1	56.5	21.4	0.7	3.0
3. 친절하다	26.3	51.3	22.3	4.0	2.9
4. 근면하다	41.7	39.7	18.3	23.4	2.7
5. 똑똑하다	26.8	52.3	20.8	6.0	2.9
6. 개방적이다	13.2	41.2	45.5	-32.3	3.4
7. 유쾌해 보인다	9.0	45.6	45.2	-36.2	3.4
8. 자비심이 많다	10.4	51.4	38.1	-27.7	3.3
9. 진실하다	21.3	53.8	24.9	-3.6	3.1
10. 안락(편안)해 보인다	12.4	38.3	49.2	-36.8	3.4
11. 돈에 인색하다	31.2	45.5	23.3	7.9	2.9
12. 관료적이다(정부 관료처럼 처신한다)	14.2	42.8	43.1	-28.9	3.3
13. 믿음만하지 않다	19.2	52.1	28.6	-9.4	3.1
14. 피상적이다(인간관계가 얇고, 형식적이다)	19.2	53.1	27.7	-8.5	3.1
15. 불만족해 보인다	25.9	45.0	29.0	-3.1	3.0
16. 깔끔하다	17.7	54.9	27.3	-9.6	3.1
17. 합리적이다(이치에 맞게 처신한다)	18.3	55.8	25.6	-7.3	3.1
18. 권위적이다(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어 상대를 누르려 한다)	15.4	41.6	43.0	-27.6	3.3
19. 경쟁적이다	22.8	46.4	30.8	-8	3.1
20. 적극적이다	28.8	47.8	23.3	5.5	2.9
21. 거칠다	29.1	44.2	26.6	2.5	2.9
22. 순박하다(가식적이지 않다)	35.5	49.2	15.3	20.2	2.8
23. 인간미가 있다	24.0	60.7	15.3	8.7	2.9

자료: 2014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2010년과 2014년 조사 결과는 많은 면에서 일치했음. 2010년 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이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동의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던 것들은 ‘근면하다’와 ‘지적이다’에 그쳤고 나머지 긍정적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음. 특히 ‘개방적이다’, ‘유쾌해 보인다’, ‘자비심이 많다’, ‘안락해 보인다’, ‘친절하다’, ‘진실하다’, ‘합리적이다’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았음.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부정적 이미지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들은 ‘돈에 인색하다’, ‘불만족해 보인다’, ‘권위적이다’ 등임. 2010년과 2014년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해석하면 일반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성장해서 남한의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에 물들지 않아 순박하고 인간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생각함.

●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갖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는 2010년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와 2014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동일한 문항들을 사용해서 조사했음.

- 문항들은 북한이탈주민이 통일에 기여하는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지, 세금 부담을 증가하는지, 사회문제를 증가하는지, 주거지역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범죄율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 2010년과 2014년 조사에서 공통적인 점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가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일반 국민들이 인식한다는 것임.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2010년에 비교해서 2014년에 더욱 증가했음.
- 반면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통일에 기여한다든지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0%를 넘지 못했음.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이 지저분하다든지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등 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부정하는 의견들이 많았음.
- 이런 결과는 다수의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를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나 일탈의 문제로까지 생각해서 기피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기여와 피해에 대한 인식 변화(2010-2014)

문항	연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차이
1.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사회의 이해와 통일 이후의 남북한 통합에 기여한다	2010	26.5	40.7	32.7	-6.2
	2014	30.3	42.1	27.6	2.7
2. 북한이탈주민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2010	22.7	46.2	31.0	-8.3
	2014	29.1	40.1	30.8	-1.7
3.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킨다	2010	43.4	40.4	16.2	27.2
	2014	49.7	34.0	16.3	33.4
4.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는 실업, 일탈 등의 사회문제를 증가시킨다	2010	33.5	47.1	19.4	14.1
	2014	32.1	40.8	27.1	5.0
5.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지저분하다	2010	17.5	51.5	30.9	-13.4
	2014	12.9	38.7	48.5	-35.6
6.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범죄 발생률이 높다	2010	14.1	52.4	33.6	-19.5
	2014	13.6	44.3	42.0	-28.4

자료: 2010년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 2014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주: 차이는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퍼센트 차이.

2. 유대 관계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친밀감

■ 2014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관심이 있다(매우 관심이 있다+대체로 관심이 있다)는 비율이 24.7%인 반면 관심이 없다(별로 관심이 없다+전혀 관심이 없다)는 비율은 44.9%로서 20.2% 포인트 차이가 남.
- 관심도는 평균 2.7점(값이 클수록 관심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원래의 5점척도를 역코딩함)로 보통 수준(3점)보다 낮음. 관심이 적다보니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도 인지하는 정도가 낮음.
-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5.9%이고, 성비에 대해서는 40.7%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가 낮음.

○ 하나센터(86.9%), 취업보호 담당관(77.9%),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75.4%) 등의 지원기관에 대해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비율이 매우 높음. 그에 반해 정착지원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4%로 높고, 고용지원금에 대한 인지 비율도 45.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가가 국민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응답한 맥락과 유사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일반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2010년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했음.**

○ 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국민에 가깝다’(43.7%)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26.9%)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70.7%에 달하는 반면 ‘완전히 남이다’(5.4%), ‘남에 가깝다’(23%)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28.4%에 그쳐서 일반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대체로 친밀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2015년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남이라고 느끼거나 남에 가깝다고 느끼는 일반 국민의 비율이 32.9%로 증가한 반면, 한국 국민으로 느끼거나 또는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67.1%로 감소했음. 따라서 2010-2015년 기간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일반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0〉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변화(2010-2015)(단위: %)

문항	조사 년도	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남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남이라고 느껴진다	긍정-부정 퍼 센트 차이	모름/ 무응답
북한이탈주민	2010	26.9	43.7	23	5.4	42.2	1
	2015	16.9	50.2	24.5	8.4	34.2	0
이주노동자	2010	7.4	30.8	47.8	13	-22.6	0.9
	2015	5.6	31	42	21.4	-26.8	0
결혼 이민자	2010	24.7	45.5	23.9	5.4	40.9	0.5
	2015	13.3	52.7	26.7	7.3	32	0
국제결혼 가정 자녀	2010	35.9	45	16.2	2.5	62.2	0.4
	2015	24.9	51	18	6	51.9	0
중국동포(조선족)	2010	17.9	42.1	33.8	5.7	20.5	0.5
	2015	10.7	34.9	41.6	12.9	-8.9	0
중국동포(조선족)	2010	-	-	-	-	-	-
	2015	3.8	21.4	46.4	28.4	-49.6	0

자료: 동아시아연구원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2010, 2015)

■ **2014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일반 국민이 갖는 친밀감을 측정한 결과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는 수준(보통인 3점보다 높은 3.3점)으로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18.2%)보다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42.3%)이 더 많았음. 다른 소수자들, 예를 들어 외국에 사는 재외동포, 국내에 사는 중국동포,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여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약간 가깝다고 느낌.**

○ 특히, 일반국민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가장 크게 거리감을 느끼고 그 다음으로 중국동포, 외국에 사는 재외동포, 결혼이민여성의 순서로 거리감을 느낌. 비록 다른 소수자들에 비교해서 나은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일반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

〈표 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

문항	가깝다	보통이다	가깝지 않다	차이	평균(5점척도)
1. 외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사는 재외동포	18.2	39.4	42.3	-24.1	3.3
2. 중국국적을 갖고 국내에서 사는 중국동포	15.6	40.8	43.6	-28	3.3
3. 북한이탈주민	19.6	42.6	37.8	-18.2	3.2
4. 외국인 노동자	9.2	33.5	57.4	-48.2	3.6
5. 결혼이민여성	18.5	42.4	39.1	-20.6	3.3

자료: 2014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소수집단에 대해 다수집단이 느끼는 거리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보가더스 척도를 활용해서 2014년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일반 국민이 갖는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결과 가족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강하지만 그 외 다른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특별히 거리감을 보이지 않음.**

○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상황들에서 일반 국민은 일관되게 북한이탈주민과 관계를 맺는 것을 꺼려하지 않음. 특히, 직장 동료로 일하는 것과 이웃의 주민으로 사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용도가 높았음.

○ 하지만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거리감이 큰 경우인 가족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거리감의 평균이 2.9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음.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바로 가족의 배우자와 같이 친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을 꺼려하는 성향이 강함.

〈표 1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문항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차이	평균(5점척도)
1. 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는 것을 꺼리게 될 것 같다	17.8	29.7	52.5	-34.7	3.4
2. 나는 북한이탈주민이 내가 속한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 같다	16.5	31.1	52.3	-35.8	3.4
3. 나는 북한이탈주민과 이웃하여 살게 되는 것을 꺼리게 될 것 같다	15.4	27.9	56.7	-41.3	3.5
4. 나는 북한이탈주민이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동료가 되는 것을 꺼리게 될 것 같다	12.2	29.9	57.9	-45.7	3.6
5. 나는 북한이탈주민과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을 꺼리게 될 것 같다	16.4	31.9	51.4	-35	3.4
6. 나는 북한이탈주민이 내 가족의 배우자가 되는 것을 꺼리게 될 것 같다	34.1	38.8	27.1	7	2.9

자료: 2014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3. 신뢰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요건은 신뢰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취업과 같이 중요한 생활기회를 제공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회구조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기 쉬움.**

- 2014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용하는 정도는 낮음.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남한주민과 똑같이 어렵다거나(44.1%),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도지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45.7%), 국가 안보를 다루는 직책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근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거나(50.5%) 하는 식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는 것을 꺼리는 응답자들이 수용하려는 응답자들보다 많음.
- 한편 북한이탈주민도 열심히 일하면 남한주민과 같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46.6%)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22.6%)보다 많음. 또한 남한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출신 치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자들(36.4%)이 꺼려진다는 응답자들(26.6%)보다 많음.

- 전체적으로 일반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주민과 동일한 존재로 수용하는 정도가 낮으며, 특히 국가 안보와 정치권력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함.

〈표 13〉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관한 진술에 대한 응답

문항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차이	평균(5점척도)
1.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남한주민과 똑같이 어렵다	44.1	28.1	27.8	16.3	2.8
2. 북한이탈주민도 열심히 일하면 남한주민과 같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	46.6	30.8	22.6	24	3.2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장/도지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45.7	31.5	22.8	22.9	2.7
4. 국가 안보를 다루는 직책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근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0.5	32.1	17.3	33.2	2.5
5. 남한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출신 치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꺼려진다	26.6	36.9	36.4	-9.8	3.1

자료: 2014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4. 편견

■ **일반 국민은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고 생각함. 2014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5.6%는 편견이 크다고 생각하는 반면 16.3%만이 편견이 없다고 생각함.**

- 편견의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말투, 외모,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남한주민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 반면 북한이탈주민이 교육 수준이 낮거나 소득 수준이 낮거나 근로 의욕이 약하거나 범죄 및 일탈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거나 부모·형제를 버리고 혼자 내려와서거나 북한이 경제적으로 못 살아서 편견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즉 '다름'이 편견의 주된 원인인 것임.

5. 접촉 경험

■ **접촉기회에 따르면 동등한 지위에서 상위 목표를 두고 지속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집단 간 편견을 감소할 수 있다고 함. 따라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에 위와 같은 조건 하에서 접촉이 이뤄지는지의 여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 국민의 편견 감소의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됨.**

- 2014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중 북한이탈주민을 지인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전체 응답자 중 5.7%만이 북한이탈주민을 자신의 친구나 동료, 또는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관계를 맺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지인이 되는 경로는 주로 직장(33.2%), 이웃 또는 동네사람(25.1%), 학교(15.5%)에서 처음 만나게 된 것이고, 그저 알고 지내는 사람(32.7%), 이웃 또는 동네사람(13.9%), 직장 동료(12.6%)의 관계로 지내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지인과의 관계는 지위나 권력 면에서 동등하다(매우 동등하다+대체로 동등하다)는 비율이 53.8%로 동등하지 않다(어느 한 쪽이 대체로 높다+어느 한 쪽이 높다)는 비율(10.5%)보다 5배가량 높음. 북한이탈주민 지인과의 만남 횟수는 1년에 1회 미만이 29.5%로 가장 높고, 1~3개월에 1회 정도는 23.9%, 1개월에 1회는 19.2%임.
- 북한이탈주민 지인과의 친밀한 정도는 친밀하다(매우 친밀하다+대체로 친밀하다)는 비율이 32.4%로 친밀하다(별로 친밀하지 않다+전혀 친밀하지 않다)는 비율 30.5%와 큰 차이가 없다. 친밀감은 평균 2.9점(값이 클수록 친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원래의 5점 척도를 역코딩함)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낮음.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해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인에 대한 인상이 좋아졌다(매우 좋아졌다+대체로 좋아졌다)는 비율은 46.3%로 나빠졌다(약간 나빠졌다+많이 나빠졌다)의 비율 10.4%보다 4배 이상 높음.
- 인상의 변화는 평균 3.4점(값이 클수록 인상의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원래의 5점 척도를 역코딩함)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높음.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인과 계속 알고 지내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47.3%로 더 이상 알고 지내고 싶지 않다는 응답(8.3%) 비율보다 훨씬 높음.
-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일반 국민 중 북한이탈주민을 지인으로 알고 지내

는 사람은 매우 적고, 접촉 회수는 빈번하지 않고, 친밀감의 정도도 높지 않음.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지인과의 접촉이 있게 되면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접촉의 유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정도를 측정했음.
 -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북한이탈주민과의 직접 직접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최근 1년 동안(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6.6%에 불과함.
 -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대면해 대화를 나눠본 후 응답자의 39.4%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상이 좋아졌다(매우 좋아졌다+대체로 좋아졌다)고 응답했음. 나빠졌다(약간 나빠졌다+많이 나빠졌다)는 응답비율은 13.2%임. 대화 후 인상 변화의 평균은 3.4점(값이 클수록 인상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원래의 5점 척도를 역코딩함)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높음.
 - 일반 국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사람(1순위+2순위)은 이웃 또는 동네사람(28.3%), 친구(24.8%), 가족(12.2%)임. 반면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다는 응답비율도 33.5%에 달함.
 - 일반 국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에 가장 많은 영향 미치는 기관(1순위+2순위)은 언론(91.6%)이고 그 다음이 정부(50.3%)임.
- 직접 접촉의 정도는 낮은 반면 간접 접촉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밝혀짐. 일반 국민은 언론 매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 남한 정착에 관련한 내용을 가장 자주 접촉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27.8%),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죄책감(23.9%),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21.7%), 실업, 빈곤 등 사회 부적응(21.5%)이 언론 매체에 자주 노출된다는 응답비율이 높음.
 - 한편 일반 국민은 언론 매체에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범죄, 인신매매 등의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자주 노출된다고 인식하지 않음.
- 언론 매체를 통한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접촉 후 일반 국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을 이

해하고(53.7%) 남한주민과 같은 한민족이라는 생각(46.4%)하게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높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34.0%), 친근해지며(27.7%), 정부의 지원정책을 지지하게 되었다(26.4%)는 응답자의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보다 많음.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다르다는 생각이 강해지지 않는다(35.1%)라는 응답비율도 높음.

-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 모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밝혀짐. 또한 언론 매체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 북한이탈주민의 처지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VI 결론과 정책 제언

- 본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정착한지 20년이 지나고 이제는 이탈주민이 아닌 남한주민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시점에서 적응의 관점에서 통합의 관점으로 연구와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음.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의 실태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지표를 제안했음. 아직 이러한 사회통합 지표에 기반을 둔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과 선행 실태조사 결과들을 사용해서 사회심리적 측면의 사회통합 현황을 점검했음.
- 문화적 차원의 통합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의 대인관계에서 언어나 가치관, 사고방식 또는 사회제도 등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화생활 중 여가활동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시청과 같은 대중매체 이용을 가장 많이 하고 취미활동,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학습활동 등 적극적이고 자기개발적인 여가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관계에서 한국사회에 연고가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보와 기회에 연결될 수 있는 사회연결망 부재의 문제를 안고 있음. 교회를 제외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일반 국민과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모임과 단체는 별로 없음. 이들은 일반 국민과 일차적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결국은 동료 북한이탈주민들끼리 어울리게 되면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됨.

- 심리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간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 일반 국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태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반 국민의 편견과 차별은 사회 및 직장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소속감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을 남한사람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는 반면 일반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사람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어 차이를 보였음.**

-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문화와 풍습, 남한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남한의 사회문화에 동화하고 남한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강하게 갖고 있음. 비록 경제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유대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의 접촉과 교류는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피상적인 인상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짐.**

- 일반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고, 신뢰하거나 친밀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또한 일반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을 비록 차별하려는 의도는 별로 없지만,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의도도 없으며, 이들과 관계 맺기를 꺼려함.

■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서 가치통합에 속하는 소속감과 유대관계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 정책은 한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물질 토대를 강화하는 정책지원을 지속해야 하지만 마음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속감과 유대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임.**

■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의 사회심리적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파트너가 일반 국민이라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이 귀찮고 부담되는 존재가 아니라 유익하고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사례들

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사회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일한국에 대한 신경통의 제공하는 등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 예를 들어, 소수이지만 북한이탈주민 자신이 한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자원봉사단을 조직하는 등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들이 존재함.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자원봉사단' 사례 등을 지원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언론 매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90%이상이 언론 매체를 통한 간접접촉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의 대중매체 콘텐츠를 접하게 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정부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교양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광고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친근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 제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시민참여형 북한이탈주민 관련 방송 모니터링사업을 전개해서 북한이탈주민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해서 시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그래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요구와 대응이 필요함. 또한 궁극적으로 '재난 보도에 대한 언론 방송의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주무기관과 전문가 그룹, 그리고 언론과 방송기관간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언론 방송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이 상호인식과 문화적 차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남한주민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조직생활의 원리, 대인관계의 원리 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함. 현재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기술적이고 도구적인 측면에 치중하기 때문에 정작 직장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직업훈련의 기간을 확대하고 내용을 세분화해서 기본 직업훈련단계에서는 의사소통, 대인관계, 시간관리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의 심화 직업훈련단계에서 전공 분야의 직업능력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차등과 형평, 차별과 평등, 차이와 구별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합리적인 차등을 차별로 이해하거나, 자기중심적 판단으로 스스로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따라서

하나원과 하나센터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차별과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배제를 통한 피해를 경험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조사와 피해 구제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넷째,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일명 ‘브리징 프로그램’(bridge program))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들은 북한이탈주민만을 별도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해지고 역차별 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음. 따라서 편견 해소 방안으로 잘 알려진 ‘접촉가설’의 전제조건인 상위의 공통 목표를 위해 동등한 지위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실제로 성공적인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의 주민통합 사업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의 수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 동등한 지위에서 상위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진행했음. 대표적으로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추진했던 “남북여성합창프로젝트 ‘너와나, 우리의 목소리’” 사업에서는 남북한 여성들이 합창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연에 참여하면서 서로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윤인진 · 박운숙 · 송영호, 2011). 2014년 10월 현재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친근하고 밝은 이웃으로 수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다큐영화인 우리 가족을 자치구를 순회하면서 상영 중임.
- 다섯째,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시대적 환경과 일반 국민의 인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착지원정책의 논리와 지원방안을 개발해야 함. 지금까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을 ‘통일 역군’으로 보는 시각과 ‘이주민’으로 보는 시각 사이에서 진동하였지만 점차 ‘이주민’ 시각에 기반을 둔 지원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함. 과거 보상적이고 시혜적 차원에서 지급하던 정착금과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자립 정착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직업훈련장려금, 고용지원금 등을 늘린 것은 이주민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함. 과거에 비교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냉담해지고 사회 소외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통일 역군’ 시각을 부각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대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이주민으로서의 최소한의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기 쉬울 것으로 생각함.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상시화 되고 국내 거주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이들을 더 이상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갖추기보다 ‘이주민’으로 대우하여 점진적으로 일반 복지서비스 체계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동등한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한국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무와 권리, 책임과 권한의 양자를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고상두. 2010.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유럽연구』 28(2): 269-288.
- 국가인권위원회. 2005. 『국내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김영순. 2014. “인천 논현동 북한이탈주민 공동체의 경계 짓기와 경계 넘기.” 『로컬리티 인문학』 12: 121-154.
- 김혜숙. 2000.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사회문제』 6(2).
-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 및 성격』 16(1).
- 박성재. 2012.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통합제고를 위한 취업지원제도 개선방안.” 『월간 노동리뷰』 10월호, pp. 91-109.
- 신두철. 201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 2012년 KADE-KAS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신미녀. 2009.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상호 인식.”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 적응 10년, 현주소. 제2차 북한이탈주민 자력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 자료집. 국회의원회관, 6월 30일, pp. 45-84.
- 2010.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 - 한국사회 정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 『북한학연구』 5(2): 119-143.
- 심진섭. 1995. “남북통일과 남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계민 ·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제』 11(1).
- 여성가족부. 2009. 『탈북여성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연구』.
- 오수성. 1993. “적색공포(red-complex)의 본질과 심리적 작용.” 한국심리학회 1993년 학술심포지움, pp. 81-91.
- 윤인진. 2007. “북한이주민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착지원방안.” 2007. 『아세아연구』 50(20): 106-143.
- 2009. 『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집문당.
- 2011. “민족에서 국민으로: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변화.”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강원택 · 이내영 편).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pp. 167-189.
- 2013. 『동북아시아의 국제이주와 다문화주의』. 한울.
- 2014. “구별짓기 이민자 통합 정책.” 『한국 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 아연출판부, pp. 234-262.
- 윤인진 · 채정민. 2010.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주민과의 상호인식』.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윤인진 · 박윤숙 · 송영호. 2011. 『201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민간공모사업(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보고서.
- 윤인진 외. 201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과 차별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윤철기. 2014. “독일 ‘내적 통합’이 남북한 ‘마음의 통합’에 주는 교훈.” 『현대북한연구』 17(2): 9-43.
- 이성순. 2013.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 에이저(A. Ager)와 스트랭(A. Strang)의 사회통합 분석틀 적용.” 『사회과학연구』 24(3): 161-185.
- 이수정. 1999. “북한인에 대한 남녀의 편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68-79.
- 2014. “접촉시대와 경계의 (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현대북한연구』 17(2): 85-126.
- 이장호. 1992. “남북통일의 문화심리적 장애 요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 이트렌드연구소(@-trend Institute). 2000. 『북한사회와 탈북자에 대한 의식조사』.
- 전우영. 1999. “남북한 고정관념에 대한 탐색: 성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19-232.
- 전우영 · 조은경. 2000.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기대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67-184.
- 정연중. 200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 정영태 · 이진영 · 박천웅 · 윤상진. 2014.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다양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이민자 유형별 합리적 지원기준 개발 및 부처간 협업-.” 법무부 연구보고서.
- 정진웅. 2004. “‘적응’을 넘어서: 탈북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열린교육연구』 12(2): 179-194.
- 조영아. 2011.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1): 1-19.
- 조정아 · 임순희 · 정진경. 2006.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혜정. 1996. “‘북조선’과 ‘남한’의 동질성과 이질성. 또 하나의 문화통일 소모임.”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진미정 · 이순형. 2006. “새터민의 자아존중감 및 내적귀인성향에 따른 사회문화적 적응.” 『대한가정학회』 44(7): 141-152.

-
-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준영. 201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 방안 모색: 서독의 갈등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일정책연구』 21(1): 271-300.

- Ager, A., and A. Strang. 2008.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Refugee Studies* 21(2): 166-191.
- Berry, John. 1987. “Finding Identity: Segregation, Integration, Assimilation, or Marginality?.” In Leo Driedger (ed.), *Ethnic Canada: Identities and Inequalities*. Toronto: Copp Clark Pitman.
- Castles, S., M. Korac, E. Vasta, and S. Vertovc. 2001. “Integration: Mapping the Field.” Report of a project carried out by the Centre for Migration and Policy Research and Refugee Studies Centre, University of Oxford.
- Council of Europe. 1997. *Measurement and Indicators of Integration*.
- Deutsch, Karl W. 1957.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eckel, Reinhard. 1999. “Social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German Unification.” In J. T. Marcus (ed.), *Surviving the Twentieth Century*.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
- Maslow, Abraham.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 OECD. 2015.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15: Settling In*.
- Robinson, V. 1998. “Defining and Measuring Successful Refugee Integration.” *Proceedings of ECR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gration of Refugees in Europe*, Antwerp, November 1998. Brussels: ECRE.